

중국의 공동부유론과 주요 규제 동향



Global
Market
Report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조사 배경 / 3

- 3 | 1. 최근 中 정부 사회 내부 통제 강화
- 6 | 2. 공동 부유 정책 이니셔티브

II. 14차 5개년 개발계획 下 액션플랜 / 9

III. 주요 규제 동향 / 23

- 11 | 1. 빅테크 기업 규제 동향
- 22 | 2. 공교육 강화 : 사교육 시장 단속
- 28 | 3. 부동산 시장 규제
- 46 | 4. 사회 기강 강화

IV. 시사점 및 우리 기업 대응 방안 / 57

첨 부 : 현지기업 인터뷰/ 63

참고자료 / 71

요약

□ 조사 배경

- 최근 中 정부의 사회 내부 통제 강화 움직임은 사회의 중장기 이니셔티브 (공동부유, 共同富裕)를 위한 광범위한 사회 개혁의 일환
 - 공동부유는 경제적 목표인 동시에 중국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사회 불균형 격차 해소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통치 기반 핵심 ⇒ 2021년부터 각 산업 단속과 규제 대폭 확대
- 중국은 제 14차 5개년 개발 계획 기간(2021-2025) '중간소득 함정 (Middle income trap)'에 빠지지 않고 고소득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경제 전반의 개혁 필요성 제기

□ 주요 규제 동향

○ 빅테크기업 규제

- 빅테크기업의 독과점 체제 구축, 시장지배력 확대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플랫폼 경제 영역의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새로운 법규 발표 및 빅테크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규제 본격화

* 반독점법 위반으로 '알리바바'에 182억위안(한화 약 3조원) 벌금 부과('21.4월), 배달플랫폼 '메이투안'에 34.4억위안(한화 약 6천억원) 벌금 부과('21.10월) 등

○ 사교육시장 규제

- 도농간 교육 격차 확대, 자녀 양육비부담에 따른 출산율 저하 문제가 지속되자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자본유입·영리 추구 제한,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양질의 공공 교육 시스템 구축 △학교 외 사교육 기관 관리감독 강화 추진

* <의무교육 기간 학생 숙제 부담 및 과외 교육 부담 감소 의견('21.7월)> 등

○ 부동산 시장 규제

- 사회 격차, 가계 자산의 부동산 집중, 실물경제 직접금융 경로 약화, 금융 리스크 등 문제로 중국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혁 추진 및 부동산 대출의 중앙 집중식 관리 시스템 도입
- '20년 말부터 시작된 일련의 규제로 '21년 하반기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접어들자 中 정부는 다시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등 긴축과 완화가 혼재

* <부동산 용자관리 3종 규제('20.8월)>, <부동산세 개혁 시범사업 초안('21.10월)> 등

○ 사회기강 강화 : 미성년자에 영향을 주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위주

① 팬덤경제 규제

- 중국은 연예인 팬클럽의 모금활동 및 이들 대상 마케팅 등 과도하게 자본화·시장화되는 팬덤 경제에 대한 규제 시작

* 中 아이돌 경제 규모('20년) : 약 4조 위안 이상(한화 약 720조원)

② 온라인 게임 규제

- 중국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유료 결제 서비스 피해 등 문제에 직면해 관련 규제 강화, '21.9월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시간제한 조치 발표

* 미성년자 주말·공휴일 온라인게임 1시간만 허용, 22:00~08:00 게임 불가 등

□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공동부유' 방향에 따라 경제 핵심 어젠다 '성장' → '분배'로 이동

- (위기요인) 규제를 피해 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전망, 우리 기업은 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서 中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대비 필요
- (기회요인) 품질성장·내수소비 확대 기조로 신에너지차, 고급 소비재, 디지털전환 관련 품목 등 수혜산업 주목 필요

I 조사 배경

1 최근 中 정부 사회 내부 통제 강화

□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위한 광범위한 사회 개혁 움직임

○ 최근 中 정부는 ‘공동부유’의 가치를 내세우며 ‘절대빈곤 퇴치’ 강조

* 공동부유(共同富裕) : 중국식 사회주의 및 마르크스의 기본원칙으로 중국의 장기적 경제 목표 달성 방향

* 2035년까지 빈곤퇴치에 견고한 진전, 2050년까지 달성 완료 목표

※ 공동부유 추진 배경

- (1) (성장 → 분배) ‘사회주의 현대화강국’으로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
- (2) 중국의 고속성장기 종료, 경기둔화,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응
- (3) '22년 하반기 예정된 고위급 정치일정 대비 정치적 슬로건
- (4) 중국의 3대 격차(불균형) 감소 → 체제 위협 잠재 리스크 해소

○ 2021년 中 정부는 △빅테크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시작으로 △기술 부문 직원의 업무시간 제한, △핵심 학교과목의 과외 금지, △미성년자 게임 시간제한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의 개혁 작업에 착수함

< 2021년 공동부유 기조에 의거 시행한 정책 >

구분	세부 내용
불공정 시장경쟁 환경 해소	- (빅테크 기업 규제) 주요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제도 구축, 반독점 조사, 데이터 안전 강화 등 전면적·본격적 규제 강화
가계 주요 지출 항목 통제	- (사교육 시장 규제) 양질의 공공 교육 시스템 구축 및 학교 외 사교육 기관 관리감독 강화로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자본유입·영리 추구 제한 - (명문 학군 아파트 대상 부동산 대책) 명문 학군 인근지 주택가 상승 억제 위한 학군 범위 확대, 교사 순환 근무제도 도입 등 - (부동산 시장 규제) 중국 가계 자산의 부동산 집중 문제 해소 및 거주보장 시스템 구축, 부동산 보유세 도입 추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규제	- (방송연예계 규제) 영향력 있는 유명 연예인의 이중계약, 탈세 등 행위에 대한 규제, 주요 TV프로그램 사회자 점검 강화 - (팬덤 경제 통제) 비이성적으로 스타의 사생활을 쫓는 문화 지양 - (사회기강 강화) 여성스러운 외모를 한 남성 아이돌 퇴출, 립싱크 금지 등
임금근로자 처우 개선	- 소득임금 정상화·근무환경 개선 - 사회 내 만연한 996 근무제(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 비판 : 직장 초과근무 강요 금지 및 노동자 휴식/휴일 보장 강조 - 배달원 사회보장 처우 개선 : 메이투안 등 주요 플랫폼 대상 제재

자료: 국해증권연구소, KOTRA 상하이 추가 정리

- 대형 빅테크기업 포함 사회 주요 경제·산업계는 "공동부유" 국가적 목표를 위한 사업 추진 방향 재조정(리디렉션) 압박을 받고 있음
- 분산되어있는 분야별 규제를 ‘공동부유’ 장기목표의 관점에서 정책 배경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추가될 규제의 방향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내부 통제 강화 배경

-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으로, 향후 두 번째 백 년간의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시작 연도
 - ‘21년 초부터 시진핑 주석 참석 중앙 고위급 회의에서 공동부유가 자주 언급되기 시작, 중앙재경위원회에서 2단계 100주년 목표(사회주의 현대화) 달성을 위한 ‘공동부유’ 강조
- 중국은 14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 중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지지 않고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쌍순환 전략하에 산업 고도화, 첨단산업 밸류체인 내재화 및 내수확대”를 목표 제시
 - * 중진국 함정 : 기존 노동요소 투입으로 인한 성장 방식이 한계에 달하고, 고정투자의 효율이 둔화되어 생산성 하락과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

☞ 사회불균형 해소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2021년부 각 산업 내 단속과 규제 대폭 확대 전망

※ **시진핑 주석 주관 중앙재경위원회 10차 회의('21.8월) 요약**

- ① **공동부유를 착실히 추진하고, 중대한 금융 리스크 제거**
- ② **인민 중심 발전 사상 견지, 고품질 발전 속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의 밸런스를 맞춰 1,2,3차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기초적인 제도를 구축함**
- ③ **조세, 사회보장, 이전지급 등 강도 조정, 중위 소득층 비중을 확대하며, 저소득층 소득증대, 고소득층 합리적 조정, 불법 소득 단속을 통한 사회공평과 정의 촉진**
 - 고소득층과 기업의 사회 환원 장려, 소득분배 체계 정비, 불법 수입 단속
- ④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보완, 지역 발전 형평성 강화, 업종 발전 조화, 중소기업 발전 지원**
 -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보편적 인적자본 투입 증가로 주민의 노후생활과 의료보장 서비스 강화, 주택공급과 사회보장 체계 정비

2 공동부유 정책 이니셔티브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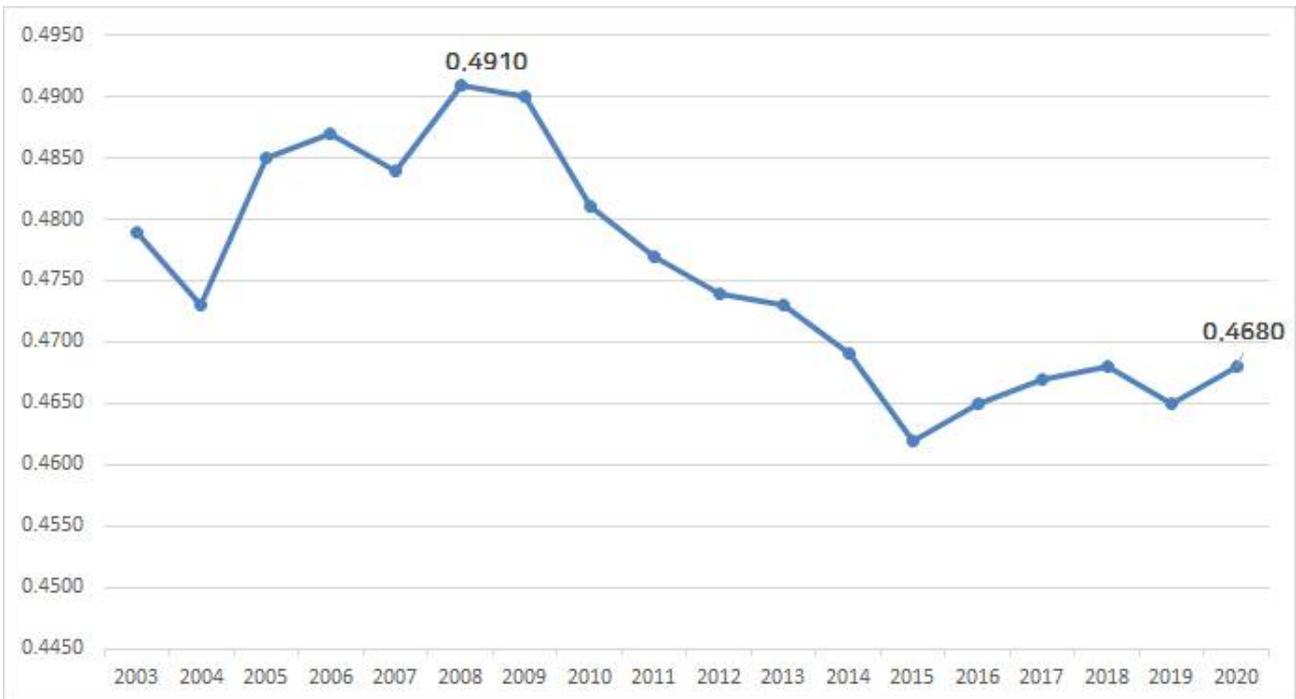
(장기) 국가 목표	(중기) 14차5개년 개발계획과 2035년 비전
공동부유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적 달성
자본시장 투자를 통한 노동소득 분배 증가 및 부동산 소득 증대 채널 조성	① 2035년까지 1인당 GDP 중진국 수준, 중간소득층 확대 (수요) 민간소비 확대·소비구조 업그레이드 (공급) 수입의존도 ↓,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 구축 도농 지역간 개발격차, 주민생활 수준 격차 감소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과 소득분배 개혁 (세제 개혁, 중위소득층 확대, 저소득층 소득증대)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형평성 증가	
사회 안전망 강화	
소득분배 개혁 (세제 개혁, 중위소득층 확대, 저소득자 소득증대)	
세 번째 분배(자선 및 기부) 장려	② 정부 거버넌스 강화 및 현대화, 기본 공공서비스 ③ 문화 교육인재 강국으로 국가 품질과 소프트 파워 강화 ④ 첨단산업·녹색산업 발전을 통한 생태환경 개선

< 세부 정책 >	
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과 소득분배 개혁	빅테크 기업 규제, 부동산 규제 강화
② 사회 안전망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데이터 보안법 재개정, 개인 연금·보험제도 확대
③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형평성 증가	공교육 강화(사교육 방지)
④ 3차 분배 개발 장려	기업의 자선 및 기부

- (배경) 중국은 그간 '중국의 특성을 가진 사회주의'라는 하이브리드 정책하에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특히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인 빈부격차 문제 여전히 산적
- 중국의 총 경제 규모는 1979년 4,100억 5천만 위안 수준에서 2021년 114조 3천억 위안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14.3%에 달함 (자료 : WIND)
 - *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 ('13) 18,311위안 →('21) 35,128위안
 - * 1인당 평균 소비지출 규모 : ('13) 13,220위안→('21) 24,100위안

- 하지만 동시에 빈부격차 또한 확대되어왔음. 중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2008년 최고치인 0.491 정점에 달한 후, 상황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15~'20년 기간 여전히 0.46대에 머물고 있으며, 산업·지역·도농간 격차는 지속 확대되어 전반적인 불균형 문제 야기
- * 지니계수 :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 0~1의 값중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통상 0.4를 넘어가면 빈부격차가 크다고 보며, 0.5를 넘어가면 심각한 불평등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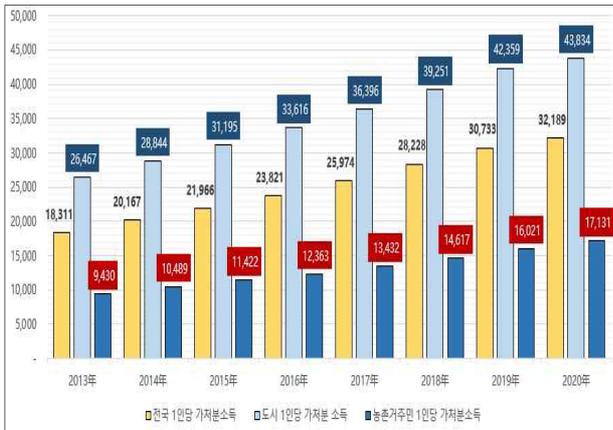
< 2003~2020년 기간 중국 지니계수 : 소득분배 불평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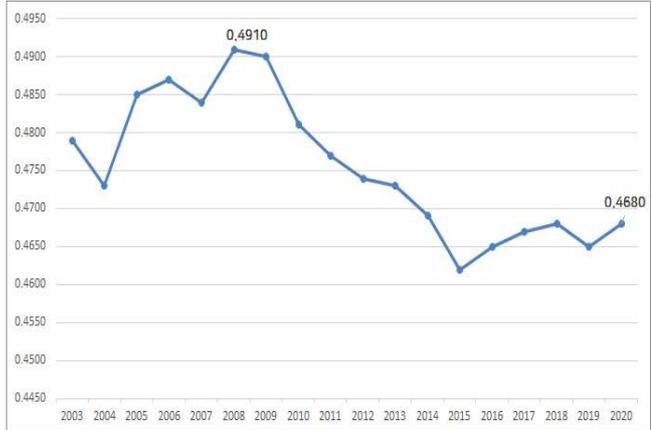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상기 中 정부의 장기계획에 따라 △가계소득 증대 지원,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 확대, △연금 등 사회복지 확대, △세계 개혁 및 규제를 통한 소득분배 조정 및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국가적 공동부유 목표에 부합토록 정책변화 예상
- 다만, '21년 8월, 중앙금융경제위원회 회의 결과,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 가계 소득 증대와 기본 공공 서비스 및 사회 보호 개선에 중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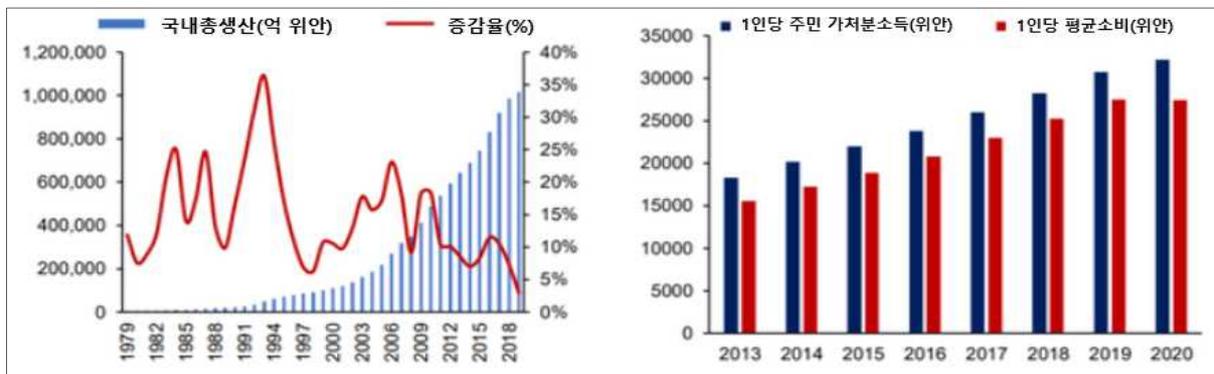
<’13~’20년 전국 및 도농간 1인당 가처분소득 격차>



<中 소득 지니계수 변동 추이>



< 中 국내총생산 및 1인당 가처분소득 및 평균 소비 증가 추이 >



자료 : 국가통계국

※ 중국의 3대 빈부격차 (도시-농촌간, 지역간, 소득계층간)

- ① 도시-농촌간 격차 : 2020년 중국 도시 지역 평균 가처분소득 43,834 위안, 농촌 지역 평균 17,131 위안으로 여전히 15,058위안 격차. 2020년 도시 소득수준은 농촌 지역의 2.55배
- ② 지역간 격차 : 중국의 동부 연안지역(광둥, 상하이 등)-중서부 내륙 지역간 격차
* (中 초상은행 보고서) 2020년 광둥, 상하이, 베이징, 장쑤, 저장 5개 지역 고소득액 인구수가 전국의 44% 비중 차지
- ③ 소득 격차 :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자본소득 비중이 큰 것이 주요 원인, 또 전체 인구의 36.1%를 차지하는 농촌 인구의 소득이 도시거주민 대비 현저히 낮음. 이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유동인구 규모등 3억 7500만명(7차 인구센서스 결과)으로 도시 내 낮은 임금, 사회 안전 시스템 내 보호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 야기

II 14차 5개년 개발계획 下 액션플랜

중국의 제14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2021~2025)

- 5년단위 경제, 국가 운영 전략을 포괄하는 계획
 -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두 개의 백년('21년 공산당 창당 100년, '49년 신중국 건국 100년) 중간점인 2035년까지 장기목표를 지향
- 中 정부의 장기목표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공동부유'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중기 목표(제14차 5개년 개발 계획)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
 - (14.5계획) '국내외 쌍순환'과 '혁신 주도형 발전'이 핵심
 - (쌍순환) 외적으로 수출, 개혁개방을 확대하며, 내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여 중국을 둘러싼 국내외 시장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전략
 - * 실질적으로 '국내 순환'에 초점을 맞추어, 내수 자립형 경제구도의 실현을 표방
 - 중국의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로 1인당 GDP로 표현, 중국의 1인당 GDP는 2019년 처음 10,000달러를 넘어 '중간소득 국가'에 진입
 - * (세계은행) 1인당 국민소득이 12,535달러 이상의 경제를 고소득 경제 또는 부유한 사회로 분류
 - 中 정부는 '중국식 현대 사회주의' 구축을 위해, 단순히 소득이 높은 국가가 아닌, 절대빈곤 감소, 부의 평등 등 중국만의 특색있는 생산구조 개편을 이루고자 함
 - 이에 국내 소비·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국가 혁신 시스템을 구축 하고(쌍순환), 핵심 기술 육성 등 주요 산업 자국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의 개발 이점을 형성해, 단순 의식주 서비스에서 벗어난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를 포괄하는 이데올로기적 진보를 표방
 - ☞ 중국식 사회기강 강화 (공교육 강화·문화산업계 규제)와 일치

- 이와 같은 기초하에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정부의 '주된 역할'을 강조. 단,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으며, 민간 부문이 비기본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권장
 - ☞ 빅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독점 금지, 3차 배분(자선·기부활동) 장려 및 사교육 등 공공 서비스 분야 최근 규제와 일치
- 최근 강화되는 통제는 공동부유(장기)·14차 5개년 개발계획(중기)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 리스크로, 장기적으로 내수 안정화를 뒷받침
 - 공정경쟁 정책 등 시장체계 정비 가속화 전망
 - 시장의 반응 추이에 따라 정책적 압박 수위 조절, 공정한 시장 제도화에 주력

III 주요 분야별 규제 동향

1 빅테크기업 규제 동향

□ 규제 개요

- 中 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① 플랫폼 경제 영역의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발표와 동시에 ② 관련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규제 본격화
- 특히 2021년 기간,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지정한 후 빅테크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반독점 조사와 함께 연관된 규제(인터넷 게임 규제·소비자 권익보호·자발적 기부 확대 등)가 잇달아 시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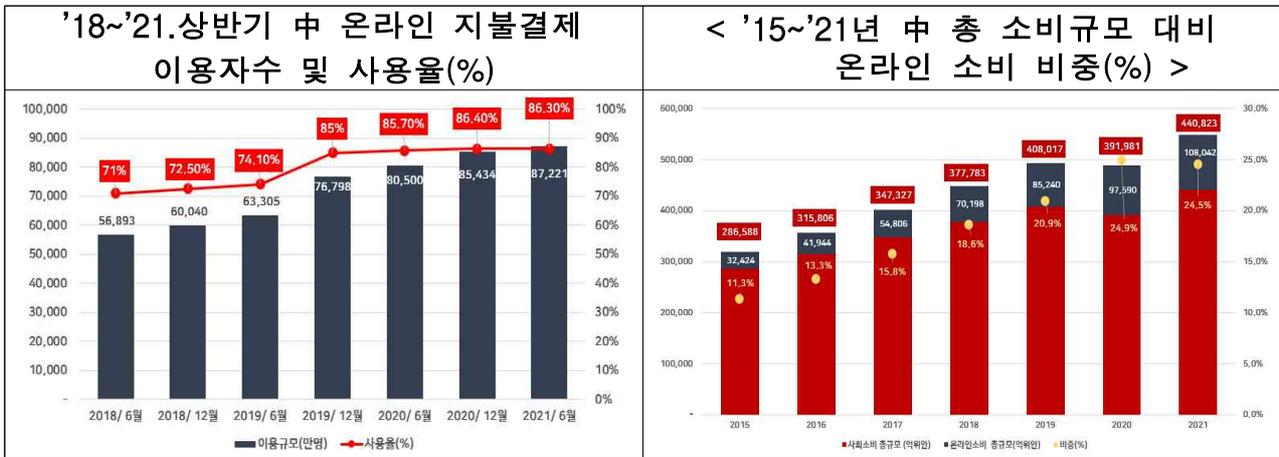
< 中 공동부유 목표를 위한 빅테크기업 규제 기대효과 >

(장기) 공동부유 목표	(단기) 빅테크기업 규제	기대효과
노동소득 분배 개선	빅테크기업 규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 시장참여자 다변화, 중소기업 육성, 세수 확보
공공서비스 제공 및 형평성 증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	
사회 안전망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데이터보안법 적용	
소득분배 개혁	빅테크기업에 대한 독점세·상속세 도입 등 적용 가능성	
3차 분배 장려	대기업 자발적 사회 기부, 환원 장려	

□ 규제 배경

- 과거 中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기반 새로운 소비환경 구축이 중국 내수 확대, 도농간 소비 인프라 개선, 고용 창출 등 신성장 동력이라는 인식하에, ‘포용적 육성전략 정책’을 펼쳐옴

- 최근 10년간,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 금융서비스 수요가 생겨났으나, 원활하지 못한 은행간 거래 시스템 등 원인으로 기존 금융기관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
 - 다른 국가들은 대체로 ‘현금→신용카드→모바일결제’로 결제 시스템이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중국은 현금 사회에서 바로 모바일 결제 시대로 전환, 급속 성장기를 맞이함
- 이에 중국 정부는 시장 내 모든 주체가 금융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普惠金融)’을 실현하고 내수소비를 활성화하고자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 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온건한 방식의 정책을 유지함
- 우호적인 시장환경으로 오늘날 중국의 빅테크기업으로 알려진 BATJ(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의 비금융 대기업은 인터넷·모바일 플랫폼 빅테크기업으로 성장, 다량의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출현하면서 中 온라인 소비경제는 단기간내 급속 성장
 - 특히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소셜커머스, 라이브커머스, 지역 공동구매 등 온라인 기반 비대면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 크게 확대
 - * '21.상반기 기준, 온라인 지불결제 이용자수 8억 7천만명, 전체 온라인 이용자의 86.3% 비중
 - * '21년 중국의 총 소비규모 44조 위안, 그중 온라인 소비규모 10조 8천억 위안, 전체의 24.5% 비중 ('15년 이후 연평균 18.8% 증가)



자료: 중국인터넷산업협회(CNNIC), 국가통계국

- (문제점) 빅테크기업은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생활서비스 등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대부분 산업 영역에서 독과점 체제 구축, 시장지배적 지위 구조 형성
- 대규모 사용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점적인 온라인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및 타 산업 영역(금융, 신용대출, IT기술 등) 및 O2O 생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방면 확장

< BATJ 플랫폼별 금융산업 영위 현황 >

플랫폼명	지불결제	재테크	신용대출	보험	증권	은행	신용조회	펀드	IT기술
엔트그룹 蚂蚁集团	알리페이 支付宝	위어바오 余额宝	마이화페이 蚂蚁花呗 마이제페이 借呗	괘타이보험 众安保险 상후바오 相互保		MYbank 网商银行 Antbank 蚂蚁银行	즈마신용 芝麻信用	앤트자산 蚂蚁财富 텐홍기금 天弘基金	
텐센트 腾讯	QQ 텐페이 微信支付	링첸통 理财通 리차이통 理财通	웨이라다이 微粒贷	웨이바오 微保 중안보험 众安保险 허타이생명 和泰人寿	텐센트주식 腾讯证券	Webank 微众银行 Fusionbank 融信银行			TrustSQL
징둥금융 京东金融	징둥력패스 京东支付 징둥페이 京东付	샤오진쿠 京东金库 징둥등가 京东理财	바이타오 京东白条 징둥진타오 京东金条 징바오베이 京包贝 징샤오다이 京小贷 징둥진차이 京东众筹	징둥안렌 京东安联		리비은행 网商银行	샤오바이신용 小白信用	JT스관요방 京东资管	북두칠성 北斗七星
두샤오만 (바이두) 度小满金融	두샤오만 페이 度小满支付	두샤오만 재테크 度小满理财	바이두샤오 度小满 유젠화 有借有还			바이신은행 百信银行			두샤오만 테크 度小满科技

< 알리바바 지급결제 플랫폼 ‘알리페이’의 O2O 서비스 >



□ 중국 정부 대응

- 중국 정부는 빅테크기업이 그간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산업의 발전 동력, △새로운 형태의 경제 비즈니스 모델 역할, △자원 할당 최적화, △지급수단 다양화로 인한 금융산업 발전, △소비자 시장 확장 및 △고용 창출 등 사회 전반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인정
 - 그러나 소수 빅테크기업에 의한 플랫폼 생태계 독점과 그에 따른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저해 등 일련의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 관리 감독과 규제강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음
- 2021년 현재까지 빅테크기업 규제는 △산업 독과점 방지, △공정한 시장경쟁 시스템 구축, △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 시스템 관리 강화 등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더 확대될 전망
- 반독점 법안·규제 제정의 목적은 기존 현행법(반독점법, 2008년)이 최근 급부상한 온라인플랫폼 경제 기업 행위를 관리 감독하기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라이브방송을 통한 온라인 판매, SNS 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소비(新型小費)* 시대에 걸맞는 공정한 시장환경 구축을 위한 것
 - * 신형소비(新型消費) : 비접촉식 소비(스마트 유통, 배달), 디지털문화, 온라인 교육, 라이브커머스 전자상거래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면적 온라인 소비 활성화·신규 직업 창출 등을 위한 중국 정부의 육성방안

□ 중국 빅테크기업 독점 및 불공정행위 규제 정책 제정 연혁

시기	정책명	기관	내용
2019.9	<독점금지협정 잠정규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에 관한 잠정규정>, <행정 권력의 남용 억제 및 경쟁 제한 임시 규정> 등 3개 임시규정 시행	국가시장감독총국	○ 중국의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의 통합 실현 후, 독점 금지 법률 시스템의 통일, 정제 및 최적화
2020.1	<독점금지법> 개정안 (공개 의견수렴 초안)	국가시장감독총국	○ 인터넷 산업도 독점행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 ○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경쟁 규칙 제정 및 시행
2020.1 2	독점행위로 인한 민사 분쟁 사건의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법률 적용	최고인민법원	○ 중국의 독점 금지 민사 소송의 법률적 프레임워크 명시
2021.2	플랫폼 경제분야 독점 금지 지침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 독점적 지위에 기반을 둔 플랫폼 업계의 부당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의 특징을 반영한 세부 규정 명시 ○ ① 플랫폼 사업자 시장점유율 기준, ② 빅테크기업의 양자택일(二選一)* 강요 등 경쟁 제한행위 금지, ③ 가변이익실체(VIE) 구조를 가진 기업결합 방지 등
2021.3	온라인거래 감독관리 방법	국가시장감독총국	○ 플랫폼 경제의 독점, 불공정 경쟁, 개인 정보 보호, 소비자 권리 보호 등 SNS,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또한 전자상거래 운영자로서 독점 금지 감독의 대상이 됨
2021.8	온라인 불공정 경쟁행위 금지 규정 (의견 수렴 초안)	국가시장감독총국	○ 기존 부정경쟁방지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포괄해 네트워크 불공정 환경 조성, 허위 선전 등에 관한 조항 명시. 특히 광고차단, 양자택일, 빅데이터에 관한 규정 명확화

자료 : 지산보연구센터(知産寶研究發展中心),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주* : 플랫폼 입주기업이 타사의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래 제한행위

- 규정 제정 이후 中 당국의 플랫폼 업계에 대한 본격적인 개입 가속화
 - 中 정부의 방식은 △규제 가이드라인 제정, △기업소환 조치, △행정처벌 등으로 구분, 법규 제정 및 사법적 처리가 비교적 시일이 오래 걸리므로, 주로 기업 소환(면담)과 행정처벌(벌금 부과) 등 조치 방식이 활용되는 편
 - 정책 시행과 집행은 국가시장감독총국에서 진행, 주로 1) 기업 간 인수합병의 위법성, 2) 부당한 가격행위, 3) 부당경쟁 4)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해 조사와 주요 사례에 대한 기업 소환, 행정처벌로 이어지고 있음

□ 빅테크기업 소환·제재·행정처벌 사례

시기	구분	대상	내 용
2020.12	기업소환	알리바바	○ ①온라인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조사, ②인민은행 외 금융당국의 시정 요구사항 전달 (지급결제 거래 투명성 제고, 부당경쟁 금지, 합법적인 개인신용 정보 수집, 법에 의거한 금융지주사 설립 등)
2021.4	행정처벌	알리바바	○ '20.12월, 알리바바 독점행위 혐의 조사 결과, 자사 플랫폼 선택 강요, 경쟁사 플랫폼을 배제한 혐의로 「반독점법」 제47조, 제49조 규정에 따라 처벌 ○ 182억 위안(한화 3조원 규모)의 벌금 부과, 중국의 반독점 과징금 최대 규모로 2019년도 알리바바의 중국 매출액 4,557억 위안의 4%
2021.4	기업소환	바이두, 알리바바, 디디, 징둥, 메이투안, 바야리 등 34개 플랫폼 기업	○ (시장감독국·인터넷정보관공실·세무총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 행정지도와 시장경쟁 질서를 해치는 관행 개선 요구 ○ 향후 ‘양자택일(二選一)’ 강요 등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처벌 경고, 각 기업에 1개월 이내 자체 시정조치 요구 ○ 기업별 ‘준법경영서약서’ 공개
2021.4	행정처벌	텐센트, 디디 등 9개사	○ 독점금지법 제 21조에 따라, 텐센트 등 주요 기업의 합작사 설립, 지분인수 위법행위 조사 ○ 텐센트 50만 위안 벌금 부과

2021.5	기업소환	디디, 디디추싱, 메이탄추싱 등	○ 주요 10개 공유차량 플랫폼 기업 소환, 가격 책정 규칙의 자의적 조정, 운송정보 독점, 악의적 운임 인하, 임의적인 회원비 인상 등 문제 지적 및 기업 책임 이행사항 제시
2021.7	제재	후야, 더우위	○ 시장감독총국, 라이브커머스 2개사의 합병 금지 발표. '후야'와 '더우위' 각 시장점유율 40%, 30% 이상으로 양사의 합병이 시장내 과점 지배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감소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합병 금지 조치
2021.7	행정처벌	텐센트	○ 시장감독총국, 텐센트의 중국음악 그룹 지분인수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벌 결정. 텐센트는 해당 지분 인수로 전체 음원 라이브러리 시장의 80% 이상 점유, 저작권 당사자와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바 있음
2021.9	기업소환	알리바바, 텐센트, 틱톡, 바이두, 화웨이, 샤오미 등	○ 공신부, 주요 온라인 플랫폼간 URL 연결 차단 금지 조치 결정. 인터넷 플랫폼간 타사의 인터넷 URL의 액세스 제한, 차별적 차단 조치를 두는 등 시장질서 방해 행위 시정조치 요구
2021.9	기업소환	텐센트, 넷이즈 등	○ 중국 선전부, 국가언론출판부, 온라인 게임 주요 플랫폼 텐센트, 넷이즈 등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심사 강화, 자본 송배주의 등 부정적인 여론 조성에 대한 방지 촉구, 특히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한 기업의 관리 강화 강조
2021.10	행정처벌	메이투안	○ 온라인 배달서비스 제공사인 메이투안 그룹에 시장지배적 행위 남용, 양자택일 강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징벌적 조치 행위 구사 등 22개의 독점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집행. 총 34억 4200만 위안 벌금 부과 (2020년 매출액의 3%에 해당)

주* : **(기업소환과 면담)** 중국 정부기관이 기업의 경영상의 문제점 지적 및 시정 요구, 정책 방향에 대해 교육하는 **중국 특유의 처분 방식**으로 실제 처벌에 이르지 않는, 기업에 대한 사전경고의 성격을 가짐

□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실현이라는 장기목표 아래, 향후 반독점 강화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 기조가 지속될 것

- 이에 ①반독점 규제 범위 확대 ②행정처벌·기업소환 사례 증가 및 ③각 성시 정부 차원의 세부 조치 이행으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개최되는 중국 정부 고위급 회의*에서 ‘반독점 강화 및 공정경쟁 정책’이 지속 언급함으로써 시장에 지속적으로 정책 신호를 보내고 있음
 - * (‘21.3월, 중앙재경위원회 제9차 회의)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보안 책임, 상품 품질 및 식품 안전 보장, 고객 데이터 보호 등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 강조
 - * (‘21.10월, 개혁위원회 제21차 회의) 공동번영 촉진 전략을 위해 공정한 경쟁의 시장환경 형성, 다양한 시장 주체, 특히 중소기업의 발전 공간 조성,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조
- 향후 데이터 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과 증권 위법행위 방지 의견 (VIE지배구조*)의 등 법규 추가 제정으로 규제 빈도와 강도가 확대될 것. 적용 산업 또한 플랫폼 외 기타 산업*으로 확산
 - * ‘21.9월 중국 공우그룹(公牛集團, 전기제품 제조) 반독점법 위반으로 약 3억 위안(‘20년 매출액의 3%) 벌금 부과. 이는 중국 절강성 시장감독국이 부과한 가장 큰 규모의 반독점 벌금
 - * 가변 이익법인(VIE) : 투자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더라도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법적 사업 구조
- 최근 글로벌 동향 또한, 전세계적으로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치와 규제 수단이 도입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플랫폼 경제에 대한 반독점 거버넌스가 강화되는 추세

○ 미국 플랫폼기업 규제 동향

- (‘19.6) 美 법무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구글(FAAG)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실시
- (‘20.7) FAAG 기업 청문회 개최·소송 제기
- (‘20.10) 美 하원 ‘디지털 시장경쟁 조사보고서’ 발표.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반독점 소송 제기
- (‘21.6) 美 하원 ‘플랫폼 독점 종료법’ 포함 5개의 법률 초안 발표

○ EU 플랫폼기업 규제 동향

- ('17~'19년 기간 구글에 3건의 반독점 벌금 부과, 총 82억 5천만 유로
- ('19.7) 아마존의 제3자 판매자 데이터 오용과 서비스에 대한 독점 금지 조사 발표
- ('20.12) EU 사용자 기본권 보호, 안전한 디지털 공간 조성 목적의 '디지털 서비스법'·'디지털 시장법 제정'

○ 중국 정부는 플랫폼은 '시장(산업)'과 '기업'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지녀 온라인 거래에서 독특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

- 플랫폼의 책임 범위 강화, 내부 관리 규범 수립, 플랫폼-판매자-소비자간 안전하고 건강한 온라인 소비환경 구축 강조

○ (전통 산업 대비 디지털 경제의 특징) ①가상세계에, ②방대한 양의 실시간 데이터를 생산요소로 한, ③다양한 알고리즘 설계 및 운영으로 시장가치를 창출

- 규제 당국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플랫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알고리즘 설정, 잠재적 경쟁자 거래 제한, 자사 플랫폼 우대정책 등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시장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은 현실

* 다량의 사용자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기반, 소비자의 지불 능력, 소비 선호도, 소비 습관 등에 따라 가격 차별을 두는 등 행위

○ 이에, 中 정부는 ①사전 감독 규정 및 지침 강화, ②기업의식 개선, ③규제당국 전문인력 기술교육 확대 ④플랫폼 다자간 협력 등 추진중

○ 상기 반독점 규제 외에도 中 정부는 최근 빅테크 기업의 '3차 분배' 필요성에 대해 강조

- '21.8월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3차분배> 개념 언급 이후, 빅테크 기업(알리바바, 텐센트)의 사회 기부 발표가 이어지고 있음

< 1/2/3차 분배 정의* >

구 분	개 념
1차 분배	시장구조에 따른 사회적 분배. 환경 여건에 따라 소득 격차 발생
2차 분배	정부가 법률, 규정 등으로 소득조정 수행. 소득세, 재산세 등 주로 세금 제도를 통해 구현
3차 분배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가계 지원을 위한 기부를 포함하는, 도덕적 역할에 기초한 소득의 재분배

주 * : 중국 경제학자 리이닝(厉以宁) 교수가 1991년 <공동부유의 경제 발전 경로> 저서에서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최근 중국 고위급 회의에 인용.

< 2021년 중국 빅테크기업의 사회 기부 발표 사례 >

- 1) **(텐센트)** 기초과학, 교육, 탄소중립 등 미래형 프로젝트를 위한 **500억 달러** 규모 투자 발표('21.4월) 후 **500억 위안** 규모 추가 투자 발표
- 2) **(알리바바)** <알리바바 공동부유 10대 이니셔티브> 발표 ('21.9월)
 - (10대 이니셔티브) 저개발지역 디지털 건설 / 농촌산업화 / 중소기업 해외 진출지원 / 양질의 고용 / 복지 / 도시-농촌 디지털 평등화/ 취약계층 서비스 보호 / 1차의료 역량 향상 / 200억 달러 규모의 공동번영 개발 기금 조성
 - '25년까지 **1천억 위안** 규모 저개발지역 디지털화 건설 지원, 중소기업 지원, 고용 복지 보장, 1차 의료 강화 등을 위한 기금 조성 발표
 - * '20년 순이익 : 약 1,325억 위안
- 3) **(바이트댄스(틱톡))** 창업자 장이밍(張一鳴), 교육 재단 설립을 위한 **5억 위안** 기부 의사 발표
- 4) **(핀둬둬(拼多多))**, 상장 이후 첫 순이익과 향후 기업이익 농촌지역 기부 의사 발표. **100억 위안** 규모 농업과학기술 프로젝트 실시
- 5) **(샤오미)** 창업자 레이쥔(雷軍), 샤오미 재단에 **6억 6천만 위안** 규모의 주식 추가 투입. 저소득층 가구 자금 지원, 의료서비스, 학교 인프라 개선 등에 활용
- 6) **(메이투안(美團))** 창업자 왕싱(王興), **23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자선기금으로 전환, 교육과 과학연구 등 공익사업 활용
- 7) **(중국반도체(中國芯片))** 창업자 우인룽(虞仁榮), **200억 위안** 규모 절강성 닝보 비영리 연구대학 설립 ('21.1월)
- 8) **(지리자동차)** 직원소득 증대계획, 건강보험, 직업 향상 등 보완 계획 발표 ('21.7월)

○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 감소 전망

- 중국은 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해 수년간 소프트웨어, 하이테크 등 산업 분류기업 대상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혜택을 제공
- 이와 같은 지원 정책으로 인터넷 산업이 크게 성장했으나, 현재 중국 당국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세금 뉴딜' 정책 도입 검토중
- 주요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 다양한 IT 자회사를 두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전반적인 세금 환급 수준은 하락할 것

○ 中 공신부 발표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21.4월)

- 독립적 특허 또는 지적 재산권, 연구개발 인력 최소 25%, 연구개발비용이 전체 매출의 7%(이전 6%) 이상,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55% 이상(이전 50%) 등으로 구분되며, 표준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만 10% 우대세율 적용

○ 현재까지 추진된 인터넷 분야의 관련 규제 정책은 크게 3가지 주요 범주로 구분

- ① 독점 금지/불공정 경쟁 관련 정책 및 법률 및 규정
 - ② 개인 정보 보호/데이터 보안 관련 정책 및 법률 및 규정과 온라인 거래 감독 및 관리
 - ③ 플랫폼 고용 표준, 뉴스 액세스 등 정책 및 법률 및 규정 등
- 2021년 9월 시행 <데이터안전법>*, 2021년 11월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책을 포함하여, 세제 개혁, 재산세(독점세, 상속세 등) 도입 전망으로 빅테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될 것
 - 단기적인 시장 충격(빅테크기업 이익감소·주가 하락 등)이 예상되나, 전반적인 사회 규제 강화가 일반적·장기적인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 폭은 다소 감소할 것

2 사교육 시장 규제

□ 규제 개요

- '21.7월, 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총무처 공동 <의무교육* 기간 학생 숙제 및 과외 교육 부담 감소 의견> 발표. 이는 중국 건국 이후 첫 공식적 교육 감독 규정, 학기 시작일인 2021년 9월 1일부 발효
- * 中 의무 교육이 초등 및 중등교육으로 구분, 6~15세 연령에 적용
- 시진핑 주석, 교육 명목으로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에 대해 "단호한 시정" 요구, 또 '21.3월 두 차례 고위급 회의에서 교육, 의료, 보건 분야 평가체계 개혁과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개발의 중요성 강조

< 사교육 관련 국가 목표 및 기대효과 >

(장기) 공동부유	(단기) 관련 정책	기대 효과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형평성 증가	공교육 강화 (사교육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교육 시스템 강화로 도농, 지역간 교육 격차 축소 ·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출산을 제고 · 온라인 사교육 시장의 급격한 자본화(투융자 규모↑) 방지

□ 규제 배경 및 목적

- (목적) '이중감소(双減)'라고 불리는 해당 정책은 △양질의 공공 교육 시스템 구축 △학교 외 사교육 기관 관리감독 강화해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자본유입·영리 추구 제한,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학교 생활 균형 개선코자 함

① (교육 형평성 문제 해결) 도농간 지역 소득격차 확대로 농촌지역 학생 대학진학을 감소, 도시 소재 학생이 더 좋은 교육 기회를 받고 있다는 인식.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란 학생이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회 문제 대두

* 칭화대 입학 저소득층 학생 비중: (1977) 34% → (2020) 3.3%(匯合智能科技 <透過“双减”看本質>, 2021.10.6.)

②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 최근 中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세자녀 허용 정책을 잇달아 발표, 자녀 양육비 부담으로 출산률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 이에 과외 수수료 관련 규정 제정으로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 감소 추진

* '20년 中 출산율 : 여성 1인당 1.3명, 70년대 6명 대비 큰 폭 감소

* '21.5월 <제7차 중국 인구조사> 결과, 60세 이상 인구 비중 18.7%

③ (공동번영) 中 빈부격차 확대로 인해 좋은 교육자원이 편중되는 현상 발생. 이는 계급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중국식 현대 사회주의 발전 방향에 위배됨. 교육기관의 자본운영을 엄격히 금지해 빈부격차 극단화 방지

□ 사교육 관련 정책 연혁

일시	주제	기관	내용
'21.4	사립교육진흥법 시행 규정(국무원령 741호)	국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성 높은 사교육 산업에 대한 정부 감독 강화를 위한 규정 ○ 외국인 투자와 외국 교과목 교육은 민간 (사교육) 과외로 제한 * 의무 교육을 시행하는 사립 학교 이사회는 중국인으로 구성
'21.7	의무 교육 기간 학생 숙제 부담 및 과외 교육 부담 감소 의견	국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교육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학교 교육의 주된 역할 강화

'21.7	<p>의무교육 단계 교과목 및 비(非)교과목 범위 통지</p>	<p>교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 교육) 도덕과 법치, 언어, 역사, 지리, 수학, 외국어(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물리학, 화학, 생물학 ○ 체육, 예술 분야, 통합 실습 활동(정보 기술 교육, 노동 및 기술 교육 포함)은 학교 밖 교육을 실시할 때 비분야 범주에 따라 관리
'21.8	<p>의무 교육 학교 가이드라인 * 의무교육학교 시험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p>	<p>교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 잡힌 수업의 법적 요건 준수 : 어떠한 명칭으로도 중점반·집중반 설치 금지 ○ 교육 계획의 엄격한 이행 : 수업 시간을 임의로 조정, 난이도 변경, 진도 조정, 방과 후 시간을 사용한 새로운 수업 진행 불가 ○ 과제 관리 규정 : 학부모를 대상 과제 배정 금지 ○ 시험관리 규정 : 시험을 불법적으로 조직 하거나, 시험 결과에 따라 학생에 좌석 배치, 라벨 부착 등 차등을 주는 행위 금지
'21.9	<p>과외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통합 등록 통지</p>	<p>교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 단계의 기존 사교육 기관은 비영리 단체로 일괄 등록 필수. 운영 허가 및 면허 취득 전까지 신규 등록과 수수료 징수 중단 * 주말, 공휴일 또는 방학 기간 사교육 제공 금지
'21.9	<p>온라인 교육 기관 승인 체계 강화</p>	<p>교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과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 승인에 관한 규정 강화. 온라인 사교육 기관은 허가 없이 유료 과목 교육 종사 금지 ○ 각 수업 시간은 30분 초과 금지(수업 간격 10분 이상) ○ 라이브 교육 시간은 초·중학교 교육 시간과 상충 금지 ○ 의무 교육 기간 라이브 수업은 21시 까지만 운영 가능
'20.10	<p>중국 미성년자보호법</p>	<p>전국인민대표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6월 1일부 시행 ○ 학교는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 협력 하에 미성년 학생의 학업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휴식,운동 시간을 보장 ○ 학교는 의무 교육 기간 동안 보충수업 등을 조직하여 학습 부담을 증가시켜서는 안되며, 유치원 또는 과외 교육기관은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초등교육 과정을 제공 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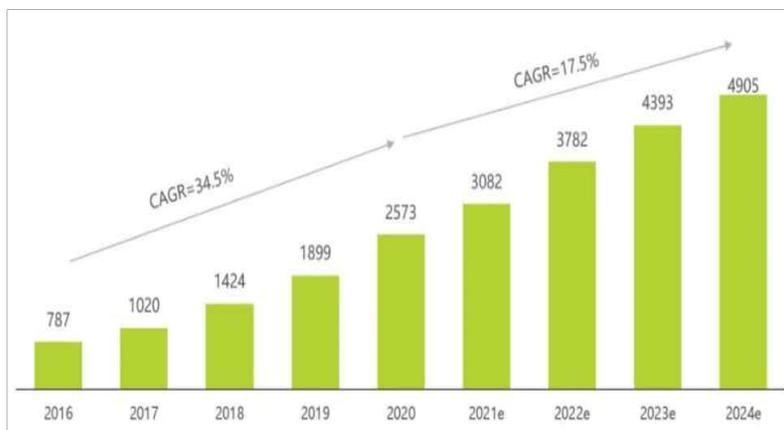
□ 교육부의 對 의무 교육 학교 가이드라인

- 해당 규제는 두 가지 주요 방점(이중 감소) 위주로, 세부적으로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 양질의 수면 확보, 독서 강화, 체력 건강증진 등 계획으로 구체화되어 제시될 예정
- 중국은 약 147,000명의 학교 조사관을 보유, 각 지방정부와 연계된 교육 감독 기관은 관련 부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모니터링 - 정책 위반 시, 비판, 행정처벌 혹은 사법기관 연계까지 이어지는 처벌 부과

□ 중국 사교육 시장 규모

- 중국 사교육 시장 규모는 2023년까지 1조 1,700억 위안(미화 1,84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규제로 **마이너스 성장 전망**
 * 사교육 시장 규모 : ('11) 2,032억 위안 ('21) 5,640억 위안로 두 배 이상 증가
-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교육 부문 또한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온라인 사교육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
 * '20년 중국의 온라인 교육 시장 규모는 2,57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5.5% 증가, 전체 교육시장 중 온라인 비율은 23~25% 수준

< 2016~2024E 기간 중국 온라인 교육시장 규모 (단위: 억 위안) >



자료 : iimedia

□ 중국 사교육 시장 투자 동향

- 2020년 중국 교육산업은 총 1,164억 위안의 자금을 조달, 그 중 온라인 교육 자금 조달 규모는 전체의 89%의 비중 차지
 - 2020년 중국 온라인 교육 자금 조달 상위 10위의 총액 약 67.5억 달러. 전체 투자금의 80% 이상 차지. 또한 온라인 교육투자금의 80%가 상위 4개사(위안푸다오 등)로, 자본의 상위 기업 집중화 현상 뚜렷
- 텐센트, 바이두 등 대기업 자본의 전략적 투자 증가, 주요 온라인 교육 프로젝트가 1,2선 대도시*에 집중된 점이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를 서두른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함

* 베이징, 상하이 등 5개 도시 온라인 교육 투자 프로젝트 비중 87.27%

< 2020년 中 온라인 교육업체 투자유치 금액 상위 10위 기업 >

연번	기업명	시 기	금액 (달러)	투자자
1	위안푸다오 (猿輔導)	2020-10-22	22억	텐센트, 힐하우스, Boyu Capital(博裕資本) 등
2	쥘예방 (作業幫)	2020-12-28	16억	알리바바, Tiger Global, Sequoia Capital(紅杉中國)
3	위안푸다오 (猿輔導)	2020-03-31	10억	텐센트, 힐하우스, BoyuCapital(博裕資本) 등
4	쥘예방 (作業幫)	2020-06-29	7.5억	fortunevc(方源資本), TigerGlobal, 카타르 인베스트먼트
5	eeo (翼鷗教育)	2020-11-27	2.65억	텐센트, GL Ventures(高齡創投), SIG
6	메이스보 (美術寶)	2020-12-24	2.1억	foresightfund(睿思基金), fortunevc(達晨創投) ChuangzhiInvestment(創致資本)
7	아이쉐시 (愛學習)	2020-11-12	2억	GIC, WarburgPincus(華平投資)
8	codemao (編程貓)	2020-11-20	2억	BPEA(霸菱亞洲旗下基金), 증신증권투자 등
9	완두스웨이 (豌豆思維)	2020-09-09	1.8억	SINOVATION VENTURES(創新工場) 소프트뱅크, DCM등
10	휘화스웨이 (火花思維)	2020-08-04	1.5억	GSR VENTURES(金沙江創投), KKR, IDG등

자료 : 첸잔산업연구원(前瞻産業研究院)

□ 시사점 및 전망

- 기존 **외국계 사교육 기관**은 <사립교육진흥법(국무원령 741호)> 제29조에 따라 중국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외국인 커리큘럼과 외국 교육 자료(교재) 사용 제한*, **기(既)등록 비즈니스 범위 변경 필요**
 - * 단, 10학년 이상 혹은 국제학교는 중국 규정을 준수하는 한 외국 교재 사용 가능
 - * 취학 전 교육 비영리 사립학교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는 가변 이익법인(VIE) 등 방식을 통해 국외로 상장되는 것을 차단하고, 어떠한 사회 조직과 개인도 인수합병을 할 수 없다는 조항(13조)이 추가됨
- **중국 교육산업**은 성장성이 크고, 수익률이 높은 산업이나, 정책 변화에 따른 불안 요인 산재, **中 당국이 개인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해 엄격히 통제할 전망**
- 외국인 투자를 명시적으로 권장하는 분야와 외국어, 직업훈련, 기업교육 혹은 대학 파트너십 등 **의무교육 기간의 학생 외 분야**에서 **유망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수 있음
- 사교육 부문 신규 외국인 투자기업은 정부의 운영 지침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IT, 예술 및 드라마, 스포츠, 음악 등과 같은 **비핵심 교육 주제 분야와 결합해 영리 단체로 재등록 검토 가능**
- 규제 정책으로 의무교육에 대한 경계가 설정됨에 따라, 사교육 부문은 **틈새시장으로 세분화될 전망**
 - 과외 전문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지만,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규모·혁신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단, 향후 비핵심 의무교육에 추가 규제가 부과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 허용 범위에 대한 추가 규정 발표 추이 관찰 필요**

3 부동산 시장 규제

□ 규제 개요

○ 2020년 말부터 중국의 부동산 시장 규제 움직임이 두드러졌으며, 크게 두 가지 정책으로 분류

- (1) 부동산 금융 감독 메커니즘 개선을 위한 부동산 세금 개혁
- (2) 거주보장 시스템 구축(住房保障体系)

- 부동산은 중국 주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부동산 산업 발전과 정책 방향은 장기 목표인 공동부유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정부의 인식

* 中 주택 자산은 총 가계 자산의 59.1%를 차지, 이는 美 가계 대비 28.5% 높은 수치 (인민은행 발표, 2020년)

○ 이에 2020년 말부터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조절하기 위한 부동산 세제 개혁이 언급되고 있으며,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보장체계 구축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음

< 부동산 관련 국가 목표 및 기대효과 >

(장기) 공동부유	(단기)제14차 5개년 계획	기대효과
자본시장 투자를 통한 노동소득 분배 증가 및 부동산 소득 증대 채널 조성	부동산 세제개혁을 통한 규제 강화 * (단기) 소득세 개혁 (중기) 재산세 확대 (장기) 독점세, 상속세 도입	· 주택 소비의 건전한 발전 (가계 자산 비중 조정) · 세수 확보 경로 다변화 (재산세 등 부과) · 부동산 리스크의 금융 시장 이전 방지
소득분배 개혁 (세제개혁, 중위소득층 확대, 저소득자 소득증대)		

□ 규제 배경

- 부동산 분야의 공동부유 장기 목표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부동산은 그간 중국 가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동시에 중국 국가 경제 성장 기반이 되어 왔으나, 자산 편중화, 소득분배 등 관점에서 금융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 또한 커짐

(1) 부동산 자산소득 증가가 투자, 소비 확대, 고용 창출 등 경제 성장에 기여

- 1998년~2019년 기간 동안 도시 1인당 주택 면적이 18.7m²에서 39.8m²로 증가. 부동산개발은 주민 자산가치 상승, 부의 부가가치 상승, 가계 소비 능력 향상, 투자 확대로 이어짐
- 中 부동산은 지난 10년간 급속히 발전했으며, 2021년 기준 GDP의 6.7% 비중을 차지하고, 전국 부동산개발 투자금액은 전체 GDP의 약 12.9%(21년 기준)으로,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 역할 수행

< 中 부동산업 및 부동산 투자액의 전체 GDP 대비 비중 >

(단위 : 억 위안, %)

연도	중국 GDP	부동산업	GDP 대비 비중	전년 대비 증감율	부동산 투자액 규모	GDP 대비 비중
2019	986,515	70,444	7.14	9.01	132,194.26	13.40
2020	1,013,567	73,425	7.24	4.23	141,442.95	13.95
2021	1,143,669	77,560	6.78	5.63	147,602	12.91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2) 중국의 부동산 개발산업은 산업 상하류 밸류체인을 다수 포함, 국가 통화정책과 밀접하게 연관

- 부동산 개발산업은 수많은 업스트림-다운스트림 연관산업을 주도하는 중추 역할을 해옴

- 업스트림 : 건축 기자재(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굴삭기 등)
 - 다운스트림 : 제조 산업
 - 기타 산업 : 부동산 소비, 가전, 인테리어
 - 3차 산업 : 금융, 미디어, 상하수도 관리 서비스 등
- 부동산은 가치 보존 및 부가가치 창출 수단으로 통화량 저수지 역할 수행
- * 1998~2021년 기간 동안 중국의 M2*는 명목 GDP의 1.2배인 8조 5천 위안 규모에서 238조 위안 규모로 명목 GDP의 2.08배 수준으로 증가
 - * 2021년말 기준 중국 M2 규모 238조 위안 대비 부동산 대출 단기적으로 부동산 금융 규제를 실시할 경우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통화량, 레버리지 관리 등 국가 통화금융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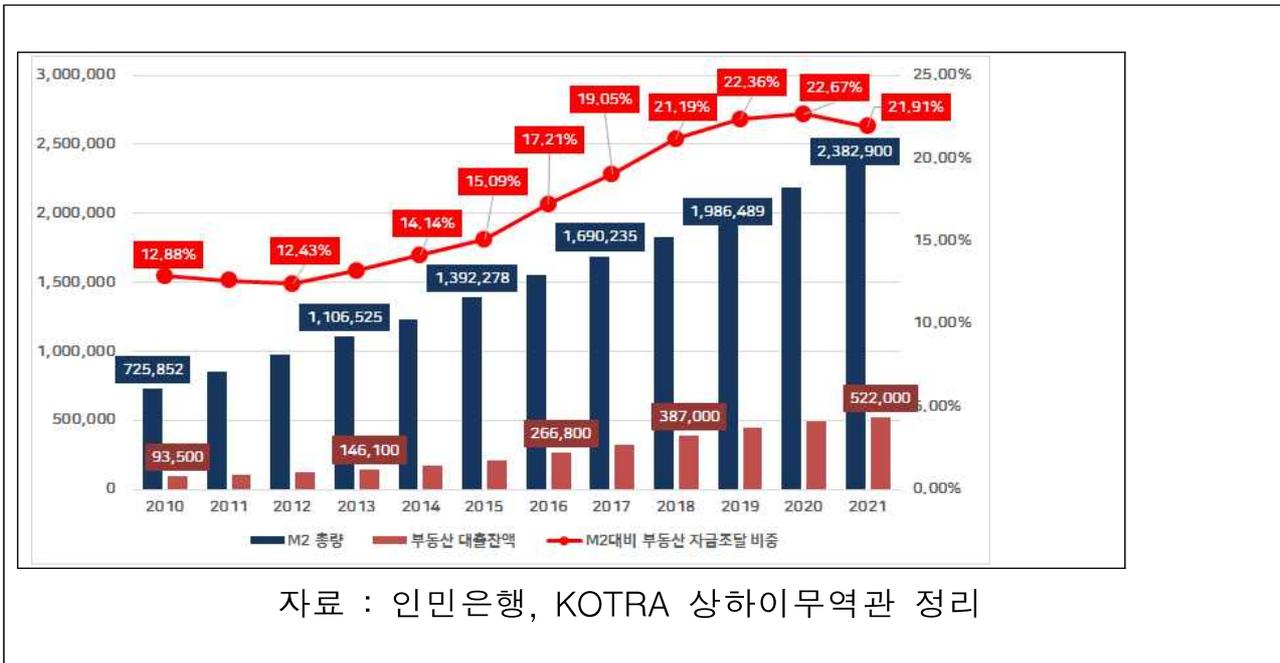
※ 중국의 M2(광의의 통화) 개념

일반적으로 M1(협의의 통화)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현금(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포함)을 의미하고, M2는 현금화가 비교적 용이한 각종 금융자산을 포함함

즉,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이후 일련의 신용 창출 과정을 거쳐, 시중은행이 대출을 통해 본원통화보다 더 많은 광의의 화폐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

M2가 중국이 고성장을 지속하는 배경으로 작용함. 중국은 (1) 간접 용자의 비중이 높으며, (2) 장기간 투자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고, 통화승수가 높으며, (3) 상업은행 또한 국유은행의 성격으로 중앙 화폐 당국과 기본적으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며 더 큰 확장 동력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상업은행과 공기업 조합은 큰 규모의 신용 확장을 발생시킨 배경으로 작용. 특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중국 상업은행은 토지가치 담보에 따라 부동산기업, 지방정부에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2013년 이후 일반 거주민의 부동산 투자가 확대되면서 광의의 통화 화폐가 대량으로 창출되었다는 분석이 있음



(3) 1994년 중국의 조세 분배 시스템 개편 이후,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지방정부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위한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 역할
 * 부동산 관련 세금 : 증서세(契稅), 토지 부가가치세, 도시토지 이용세 등 약 11종

※ 중국 지방정부 예산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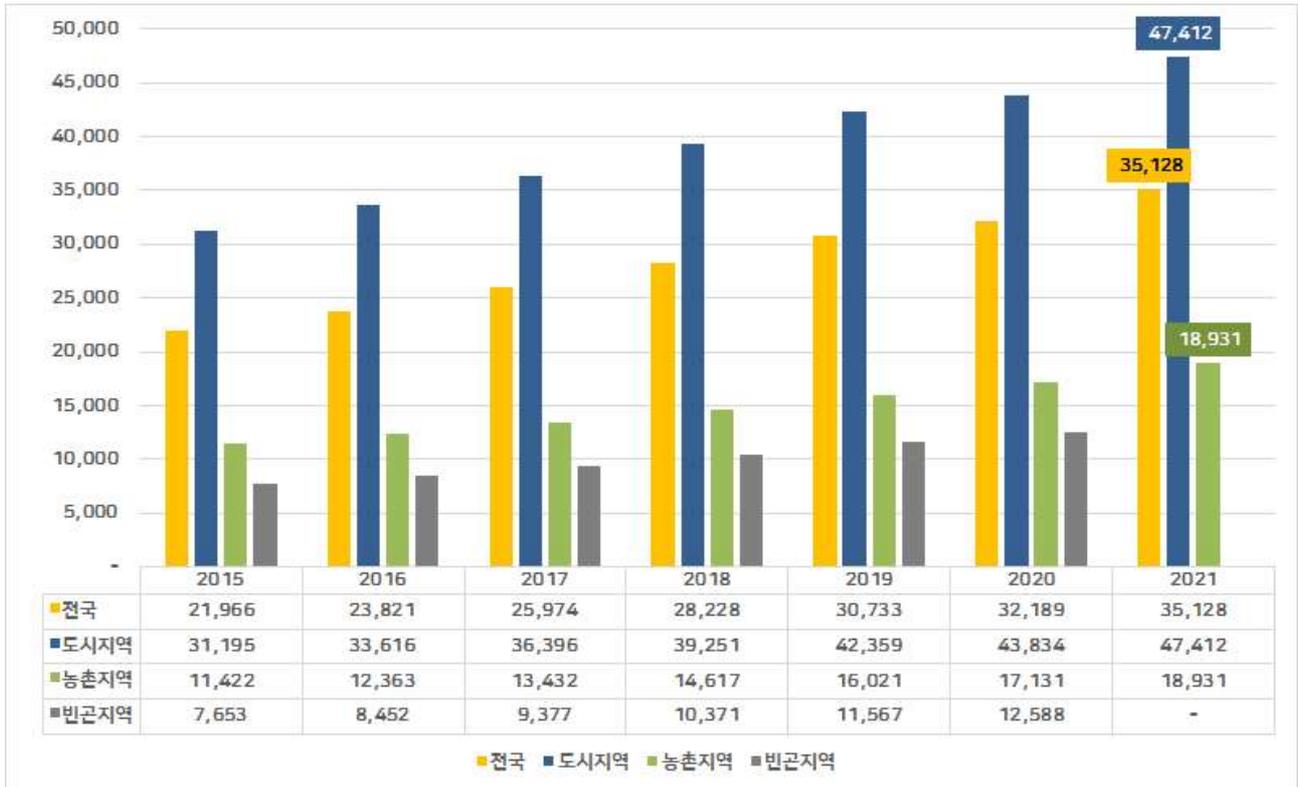
2020년 기준, 중국 전체 지방정부 예산은 (1) 일반공공예산 10조124억 위안(전년대비 -0.9%↓), (2) 지방정부성 기금예산 8조 8조 9,927억 위안(전년대비 11.7%↑)으로 총 19조 51억 위안 세수입 창출

그 중 국유토지사용권양도수입 8조 4142억 위안(전년대비15.9%↑) 규모로 전체 지방 세수의 약 44.27% 비중 차지

□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 (사회 불균형) 중국 GDP 규모는 1979년 4,100억 5천만 위안에서 2021년 114조 3669억 위안으로 연평균 성장률 14.35% 수준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산업·지역·도농간 격차는 지속 확대되어 사회 이익의 불균형 문제 야기

< 2015~2021년 전국 및 도시·농촌 지역 1인당 가처분소득 격차 >



자료 : 국가통계국

주*: 빈곤지역(貧困地區)은 2021년 이후 별도 통계발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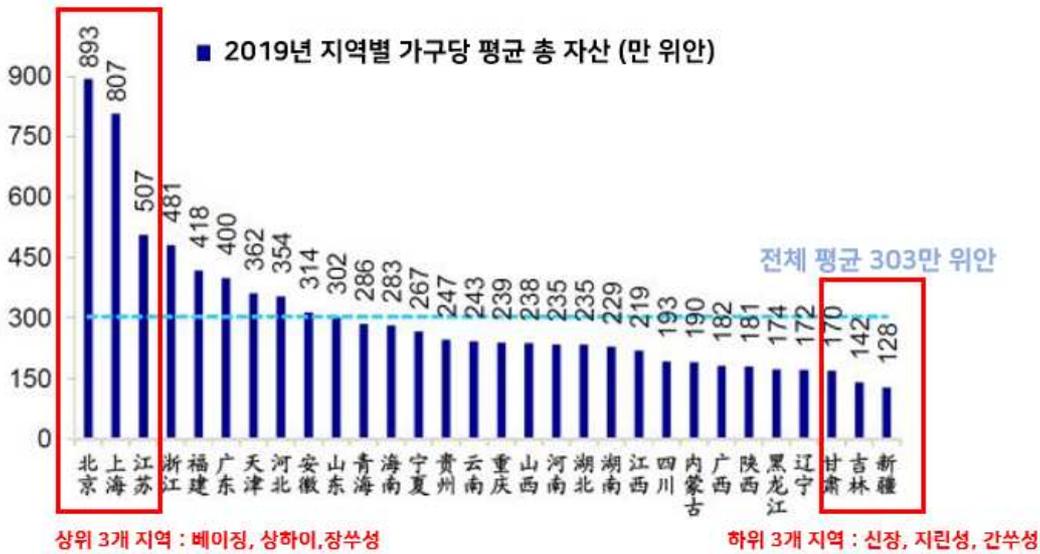
- (가계 자산 부동산 집중) 중국 정부는 주택이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어 자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일부 저소득~중간소득 가구는 이러한 부동산 가치 상승의 혜택을 얻을 수 없으며, 사회 내 분열과 중산층의 불안을 야기해 '공동부유' 달성 저해 요인으로 인식

2019년 중국 도시-농촌 가구 자산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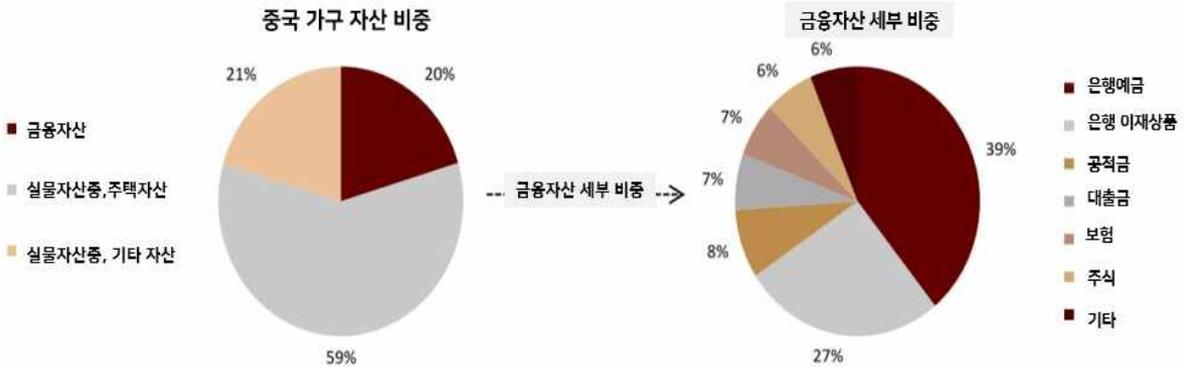
가계 자산의 59%가 부동산(주택, 상가 포함)이며, 가계 부채의 75.9%가 주택대출임. 또한 상위 20% 가계가 총 가계 자산의 63% 비중을 차지하고, 하위 20%는 전체 샘플링 가구 자산의 2.6%만 소유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지역별 가구당 부동산자산 평균을 보면 베이징 892.8만 위안, 상하이 806.7만 위안, 장쑤성 506.9만 위안으로 상위 3위를 기록했으며, 신장 지역 127만 위안, 지린성 141만 위안, 간쑤성 169만 위안으로 하위 3위 지역의 자산 가격과 큰 격차를 보임. 연안 지역 대도시 평균 자산 가격은 타 도시의 수 배에 달함 (2019년 인민은행 ‘중국가계부채현황조사보고서’)

< 2019년 지역별 부동산 자산 평균 금액 >



< 2019년 중국 가구 자산비중 >



자료 : 인민은행

- (직접금융 경로 약화) 중국 가계 자산이 지나치게 부동산, 예금으로 쏠리는 현상은 실물경제 주체인 기업의 자금 조달에 부정적 영향
 - 중국 가계 자산은 59%가 부동산(주택자산)이며, 자산 구성 중 금융자산은 약 20% 비중으로, 이 중 주식은 6.4%, 펀드는 3.5%로 총계 비중이 10% 미만, 전체 가계 자산 구성 중 2% 미만이 주식시장에 유입되어 미국 등 선진국과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실물경제 부문의 융자 방식 다양화를 통해 기업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실물경제로의 자원 재배분을 유도하고자 함
 - 최근 몇 년간 기업과 개인의 유동성·운영 자금 대출 확대, 이를 부동산 투자에 부정 이용하는 사례 다수 발생하기도 함
- (금융 리스크) 중국 부동산 개발산업의 금융 리스크는 현재 중국 정부가 '회색 코뿔소'* 요인으로 인식, 감독의 최우선 순위
 - * 세계정책연구소 미셸 부커 대표가 '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발표한 개념. 위험 요인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지만 신호 무시 혹은 늦은 대처로 더 큰 위험에 빠진다는 뜻
 - 2015년 이후 중국의 지속적인 통화 확대와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부동산 산업은 재(再)상승했으나, 최근 부동산기업 디폴트 위기 확대
 - * 1,2선 대도시 도시 주택가격 급등이 3,4선 신도시 주택가격 상승을 선도, 주택대출 또한 증가해 주거 부문의 레버리지 급증

□ 중국 정부의 대응

-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주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의 주택 본연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
 - 중국의 금융 규제 당국은 2016년부터 '주택은 거주하는 것이며 투기하지 않는 것' 강조. 또한 2020년부터 부동산 부문으로 자본유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시작됨
 - ☞ 부동산 대출 중앙집중식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규제 강화(20.12월)

- 단, 과거 미국, 일본, 동아시아 금융위기 등 국제 사례를 볼 때, 통화 과잉, 부동산의 과도한 금융 연계, 후속 긴축 정책은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식⇒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금융 정책 방향으로 선회
- '20.8월,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은행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3종규제(三條紅線)** 도입
- '20.12월 도입된 <부동산 대출 집중도 관리 시스템>은 은행별 부동산 대출 및 개인 주택 대출 집중도 상한선을 설정
- '21.3월 <영업용 대출금의 부동산 업계로의 부정 유입 방지> 통지를 통해 부동산 부문으로의 개인·기업 운영 대출금 부정 유입을 방지하고, 실물경제,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 자원 확대에 대출금이 사용되도록 유도

□ 부동산 관련 정책 내역

시 기	기 관	회의 / 정책명	내 용
2020.8	주택도시건설부, 인민은행 연합	부동산기업 융자관리 3종 규제 (三條紅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기업의 자금 감독 및 융자관리 규칙을 정해 자금 조달 감독 강화 * ① 선급금 제외 자산 부채 비율 70%, ② 순부채 대 자본 비율 100%, ③ 현금과 단기 부채 비율은 1배 이하로 설정 ○ 3개 규제를 초과하면 1년간 부채 증가 불가
2020.11	은행규제위원회	<부동산 신탁사업 특별감독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신탁 규모 엄격히 제한, 부동산 신탁 침투 감독 강화 및 부동산 시장 내 자금의 불법 유입 금지 등
2020.12	인민은행, 중국 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	<은행금융기구 부동산 대출 집중관리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금융기관의 자산규모, 기관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은행의 전체 부동산 대출잔액 비율과 개인 주택 대출잔액 비율 각각에 대한 상한선 설정. 상한선을 초과하는 기관에 대한 전환 기간 설정, 지역별 조정 메커니즘 수립

<p>2021.3</p>	<p>중국은행 보험규제위원회, 주택도시건설부, 인민은행</p>	<p><영업용대출금 부동산 부정 유입 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경영 목적 대출금의 부동산 시장으로 부정 유입을 차단해 실물경제 발전 지원 ○ (조치사항) 차용자 자격 검증 강화, 신용수요 감사, 대출 기간 관리, 담보대출 관리, 대출후 관리 강화, 은행 내부 통제, 중개기관 관리 등
<p>2021.7</p>	<p>국가발개위, 천연자원부, 국세청, 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은행보험 규제위원회, 인터넷정보실</p>	<p><8개 부처 부동산 시장 질서 지속 규제 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부동산 개발 정책 시정 ○ 부동산 개발기업의 불법적 건설 방지, 주택 매매 시 허위 광고, 거래 횡령, 비개인주택 대출 등 활용 주택 매매 금지 ○ 주택 임대사업 관리 강화 ○ 부동산 서비스 계약 강화 ○ 시정을 위한 좋은 여론 환경 조성
<p>2021.10</p>	<p>전국인민대표대회</p>	<p><국무원-일부 지역 부동산세 개혁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권한 위임 결정(초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원은 부동산세 시범의 구체적인 방법 제정하고 시범 지방 정부(상하이시, 충칭시)가 구체적인 실시 세칙을 제정 ○ 징수 대상 : 신축 부동산 ○ 과세 대상 :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 이용권자, 주택소유자 ○ 국무원 시범 방법 인쇄 발부일로부터 계산하여 시범 허가 기간 5년
<p>2021.11</p>	<p>인민은행, 중국 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p>	<p>은행 보험감독회 당 위원회 확대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 부동산 통제 장기 효과 메커니즘 완비, 부동산업 안정 추진 - 토지가격, 주택가격 안정화를 통해 시장의 기대치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금융의 버블화 경향을 억제토록 함 - 부동산 장기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그림자 금융 정비, 고위험 금융기관 리스크 해소 등 추진
<p>2021.12</p>	<p>인민은행, 중국 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p>	<p>부동산 기업 위험자산 처분을 위한 M&A 금융 서비스 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기업의 합리적인 자금 조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배경하에서, 주요 은행들이 부동산기업의 위험자산 처분 프로젝트에 대한 M&A 금융 지원 및 서비스를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함 ○ 인수·합병 대출업무의 질서 있는 전개, 채권 금융 지원강화, M&A 자문서비스 제공, 서비스 효율 향상 및 위험관리 개선 등 6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었음

2021.12	공산당 정치국 등	중앙경제 실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의 전반적인 기조는 재정과 통화 중심 '안정' 정책 신호 방출 ○ 2022년 중국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은 투기가 아닌 거주로 사용됨을 강조하고, 부동산업의 새로운 개발 모델 탐구, 장기임대 주택시장의 개발 가속화, 저렴한 주택 건설 촉진, 주택구매자의 합리적인 주택 수요 충족을 위한 상업용주택시장 지원 ○ 부동산을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삼지 않으며, 부동산업의 중장기적 건전한 발전 촉진하기 위해 지방정부 도시 정책, 감독지도 책임 강화, 안정적인 토지 및 주택가격 달성 등 방향 제시
---------	--------------	--------------	---

자료 : 각 기관 발표 종합

□ 규제 후 영향

- '20년 말부터 시행된 일련의 부동산 규제로 '21년 말까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방 압력
 - 2021년 1~3분기까지 중국 부동산 규제당국은 '3개의 안정(三穩)'을 목표로 '주택 투기 제한(房住不炒)'을 일관되게 시행했으나, 4분기 들어 중앙정부가 잇달아 긍정적 신호를 방출하며 긴축과 완화가 혼재하는 양상
 - * 부동산 대출 규제, 관리 감독 강화로 전반적인 부동산개발 투자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중앙정부의 '주택 거주자의 실제 수요 충족'을 위한 개인 모기지 대출은 증가함

< 중국 정부 부동산 관련 긴축-완화 정책신호 방출 동향 >

(긴축) 2020년 말 ~ 2021년 3분기

(’20년말) 인민은행, <부동산 대출 집중 관리 시스템> 도입, 대출 비율 다양화 및 개인 주택 대출 상한선 설정
 (’21.3월) 인민은행, 영업용 대출금 부동산 부정 유입 방지
 (’21.3월) 중국 양회, 주택은 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투기 조장 방지 강조. (1) 토지, (2) 주택가격, (3) 시장의 기대 측면에서 3개의 안정(三穩) 강조
 (’21.4월) 중앙정치국회의, 주택 개발 가속화, 저렴한 임대주택과 공동소유 주택공급 증가 방침 강조

▼ **중고 주택의 대출 중단, 매물 하방, 일부 부동산기업의 유동성 위기 직면**

(온건) 2021년 4분기 이후 : 부동산정책의 변곡점

중앙정부 對시장 긍정적 신호 방출

(’21.9월) 중앙은행 회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온건한 정책 입장 표현
 (’21.10월) 국가신용청, 수요층의 신용공여 보장, 대출초과 비율과 금리 측면에서 첫 주택 구입자 지원 방안 모색
 (’21.12월) 중앙정치국 회의, 분양주택 시장 활성화로 주택거주자의 합리적인 수요 충족,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순환 촉진
 (’21.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부동산업 활성화, 선순환과 건전한 발전 강조
 (’22.1월) 중앙은행 LPR(Loan Prime rate) 인하* 발표. 중앙은행의 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발표로,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지역의 개인 주택 모기지 대출 금리 일제히 조정
 * (’19년) 4.85% → (’20년 4월) 4.65% → (’22년 1월) 4.60%으로 약 2년 만에 0.05포인트 인하

▲ **중국경제 하방 압력에 대비한 온건한 통화정책 연계 :**
 부동산은 중국 금융시장과 긴밀하게 연동,
 부동산금융정책의 연속성, 일치성, 안정성을 유지 &
 중장기 발전 메커니즘 구축 추진

- (1) 中 부동산 개발투자액의 누계 증가 속도 지속 감소세. ’21년 12월말 누계증가율 4.4% 수준
 - ’21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하방 압력이 높아져 각종 지표 증가 속도 지속적 축소 양상

< 2021년 중국 부동산투자 주요 지표 >

(단위 : 조 위안, % (월별 누계))

지표/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부동산투자 누계액	1.40	2.76	4.02	5.43	7.22	8.49	9.81	11.26	12.49	13.73	14.76
부동산투자 누계증가율(%)	38.3	25.6	21.6	18.3	15	12.7	10.9	8.8	7.2	6	4.4
주택 투자 누계액	1.04	2.06	3.02	4.08	5.42	6.40	7.40	8.49	9.43	10.36	11.12
주택 투자 누계증가율(%)	41.9	28.8	24.4	20.7	17	14.9	13	10.9	9.3	8.1	6.4
부동산개발계획 총투자 누계액	83.78	86.43	88.55	90.61	93.86	95.57	96.89	98.65	99.98	101.77	103.34
부동산개발계획 총투자 누계증가율(%)	12.4	12.8	12.6	12.5	12.4	12.3	11.5	10.9	10.3	9.6	8.9
부동산개발 신규 고정자산 투자 누계액	0.71	1.01	1.17	1.41	1.86	2.12	2.34	2.53	2.81	3.37	5.01
부동산개발 신규 고정자산 투자 누계증가율(%)	45.6	30.6	24.6	23.4	32.8	32.4	31.7	27.8	20.8	20.4	16.6

자료 : 국가통계국

(2) 2021년 중앙정부의 부동산 대출 집중관리제도 도입으로 금융 감독위원회·주택건설부·인민은행 등 주요 부문이 시중은행의 경영 관리 전면 강화, 부실자산에 부동산 대출 유입 제한, 부동산 업종으로 유입되는 자금 유동성에 긴축 양상 나타남

- 중국의 부동산개발 대출잔액 '21.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0.02% 증가. 특히 지난 2~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수년간 이례적으로 '21년 하반기 들어 정책의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신규 개발 대출 발급이 신중해지면서, 부동산개발 대출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 중국 부동산 대출잔액 현황 >

(단위 : 억 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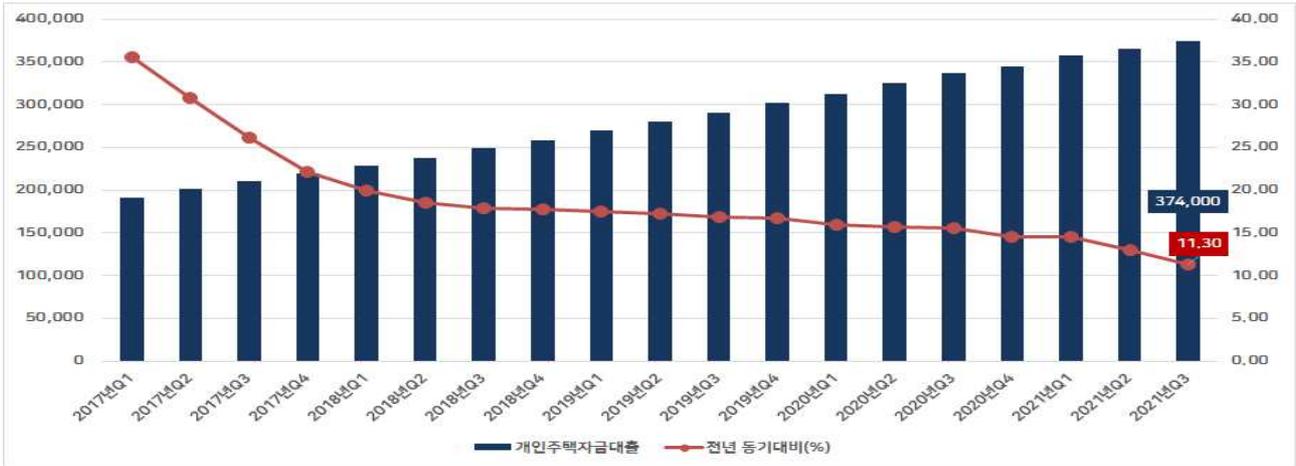


자료 : 인민은행

- (3) 중앙정치국 등 중앙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의 합리적인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주택개선형 주택 담보수요 방안을 중점 제시해 개인 모기지 대출 증가세
- 中 인민은행은 2021년 10월 처음으로 월간 개인 주택대출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11월 개인 주택 대출액은 총 4,013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532억 위안 증가, 시장에 긍정적이고 온건한 신호를 방출하는 것으로 분석

<중국 개인 주택 대출잔액 현황>

(단위 : 억 위안, %)



자료 : 인민은행

□ 지방 정부 부동산 규제 현황

- '21.7월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지방정부 면담' 이후, 지역별 부동산 규제정책 급증. 8월 한 달 간 약 54건 신규 정책 발표
 - 토지 양도 규정에 부동산 개발기업의 개발 자금 출처 검토, 프리미엄 비율 상한선 설정, 품질 경쟁 요건을 추가하는 등 부동산 개발 규제 강화
- 단, '21.4분기 이후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신호를 지속 방출하여 12월부터 각 지방정부는 부동산 완화정책을 잇달아 발표. 하지만 지역별 부동산 시장 편차가 심해 규제 흐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
 - 대체로 1, 2선 도시의 부동산 규제 흐름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시장의 하방 압력이 큰 2, 3선 도시는 부동산 완화 조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

< 주요 도시별 토지공급 규정 및 변동 내역 >

도 시	토지 분양 규칙 및 변경 사항
난징	1. 기존 "토지가+주택가+추첨(搖号)" 요건에 "품질 경쟁" 요구조건 추가
	2. 모든 토지의 최고 프리미엄율 30%에서 15% 이하로 인하
	3. 일괄적으로 경매 희망자가 신청하는 필지는 총량의 30%를 넘지 않으며, 일부 필지는 공동개발 금지, 구입 후 6개월 동안 예약판매 금지
청두	1. 경합 건설방식 취소 : "주택가+품질+토지제한" 방식 채택
	2. 모든 프리미엄 비율 10% 이내로 제한
	3. 부동산 업체의 자격요건과 자금 출처에 대한 엄격한 조사
선전	1. 모든 토지의 최고 프리미엄율 45%에서 15% 이하로 인하
	2. 일반 상품 주택 분양가격은 기존 한도를 3~9.2%로 조정. 거주용(安居型) 주택가격 한도는 2.8%~9.1% 하향 조정
	3. 동일 업체는 최대 3개 필지 경매 참여 불가
청두	1. 최고 제한 가격 도달 이후에는 추첨방식으로 경쟁자 확정 불가
	2. 최고 프리미엄율 10% 이내로 억제
	3. "분양형 1종 인재" 아파트 : 1종 인재는 규정 면적 내에서 주택 구입 자금(인테리어 가격 포함)의 15%의 정책적 혜택을 누리며, 일부의 경우 시장가 초과 금액에 따라 구매 가능
	4. 부동산 업체의 자격요건과 자금 출처에 대한 엄격한 조사
선양	1. 제한이 설정된 토지에는 " 토지가격 제한, 건축 품질" 방식 채택
	2. 경매인이 납부한 토지 구입 자금원은 모두 자기 자금 조달이어야 함
	3. 동일 기업과 그 지주(주식)의 각 회사는 동일한 종지 경매에 참가할 수 없음
쑤저우	1. 동일 기업과 그 지주(주식)의 각 회사는 동일한 종지 경매에 참가할 수 없음
	2. 부동산 업체의 자격요건과 자금 출처에 대한 엄격한 조사
	3. 5종필지(5宗地塊) 일시불 가격 상한선 하향 조절
제남	1. 동일 기업과 그 지주(주식)의 각 회사는 동일한 종지(宗地)*경매에 참가할 수 없음 *종지(宗地): 토지이용권자의 소유권 경계 내에 있는 토지
	2. 부동산 업체의 자격요건과 개발 자금 출처에 대한 엄격한 조사
	3. 분양방식은 토지가격 제한+ 정부가 보유한 예비 공공주택에서 토지가격제한 + 추첨방식으로 변경

푸저우	1. 모든 토지의 최고 프리미엄율 15% 이하로 인하
	2. 모든 필지는 "제한된 땅값+추첨" 방식을 채택하여 양도
	3. 동일 기업과 그 지주(주식)의 각 회사는 동일한 중지 경매에 참가할 수 없음
	4. 상품용 주택 판매 금지요건 도입 : 가격 외 할증, 양장 수리, 주차 자리 묶음 판매, "학군"을 이용한 노이즈 마케팅 등 금지
텐진	1. "토지가격제한 + 추첨" 형식의 경매로 최고 프리미엄율 15% 초과 금지
	2. 경매 기업에 자기자본 승낙서 및 신용 증명서 제출 요구

자료 : 中房研, <全國房地產政策變動監測報告> ('21.8월 기준)

□ 향후 전망

- 2021년 3분기 中 인민은행(중양은행)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주택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한다는 입장 발표
 - 이는 통화당국(인민은행)에서 부동산과 금융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언급. 부동산 금융 규제는 지속될 것이나 부동산 금융의 신중한 관리를 이행할 것이라 발표
 - ☞ 부동산 시장 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할 전망
- 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는 변경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역 재정 압박과 부동산 하방 위험을 고려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
 - 中 정부는 '21.9월 연속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신호를 발표. '21년 대비 '22년에는 신규 정책 규제 빈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시장 안정은 중국 정부의 확고한 장기 목표임
 - * '21.10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평온한 발전 촉진"을 언급, 중국 부동산업의 선순환과 건전한 발전 강조

- 지방 정부의 주요 세수였던 부동산 관련 세금(토지세 등)이 감소하면, 전반적인 GDP 성장률 전망에 악영향 가능성. 토지 판매 악화시 부채가 많은 텐진, 랴오닝성 등 일부 지역은 부채 위기에 빠질 수 있음
-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8월 각 지방정부의 규제 빈도가 크게 증가했으나 9월의 지역 규제 속도는 8월 대비 현저히 둔화
- 중앙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신호를 지속 방출함에 따라, 특히 3/4선 도시의 부동산 규제는 다소 완화될 여지가 있음
 - * '21.8월 29개의 주요 도시 신규 상업용 주택의 거래 면적은 약 2,134만 평방미터, 전월 대비 10% 감소,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해 정책 규제 효과가 있다고 분석
- 부동산 규제 정책은 소득 재분배 관점에서 2차 분배(정부의 시장 재배치)와 관련되며, 이를 위해, 기본 제도구축, 조세, 사회 보장(주거 안전망 구축), 고소득 조정, 불법 소득 억제 등으로 연결됨
 - ☞ 2022년 상반기 중 일부 지역 부동산 재산세 시범사업 확대
 - * 재산세 시범사업 부과 범위 확대 및 세율 인상 예상, 이는 주택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

- * 부동산 세금 입법 및 개혁으로 직접 세금 시스템을 개선하고 점차적으로 직접 세금의 비율을 증가시켜 소득 분배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 시사 ('20.12, 류쿤 재무부 장관<현대 금융 및 조세 제도 구축> 발표)
- * 금융 및 조세 정책의 3가지 주요 초점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제안 ('21.3, 한정 부총리)
- * 베이징에서 부동산세 개혁 시범사업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21.5, 재무부/ 전인대 상임위원회/ 예산공작위원회/ 주택건설부/ 세무총국)
- * '21.10월,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31회 회의에서 중국 국무원은 부동산세 입법과 개혁 추진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일부 지방 정부에 부동산 세제 개혁을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

□ 中 정부 부동산 시장 장기 발전 방향

방 향	내 용
<p>부동산 금융정책 안정을 위한 점진적인 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금융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 거주자 레버리지 증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합리적으로 안내 ○ 동시에 차별화된 주택 신용 정책을 준수, 주택 수요 지원, 주택 소유 그룹 개선, 투기수요 통제 ○ 대형 부동산기업의 부채 위험 형성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9월 현재 주택 채권 채무 불이행액은 49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급증, 신용 위험이 크게 증가 - 부동산기업 부채 위험이 금융기관으로 이전, 금융자산 시스템 악화, 업계의 투자, 판매, 자금조달 채널 악화
<p>주택 가격 안정화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차 5개년 계획은 주택 소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정책 규제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가 아닌, 중국 거주자 가족의 거주 목적으로서의 가격 안정화
<p>재산세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현재 부동산 세금은 좁은 과세 범위, 낮은 세율 및 제한된 규제 기능으로 주민 빈부 격차의 주요 원인 ○ 재산세(부동산 세금)의 부과는 주민 재산의 격차를 크게 줄일 것. 단, 재산세 도입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 운영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도입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소유자의 자산 손실 확대 우려 ○ 부동산세 제도가 구축은 투기 방지, 소득분배, 재산배분, 소득격차의 양극화 억제 역할 수행할 것
<p>임대주택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중국의 임대주택 보급은 불균형적, 중국 거주민은 주로 주택을 구입. 2020년까지 중국의 도시 가구 임대 비율은 약 25%로 선진국의 30% 이상보다 낮은 수준 ○ 이에 임대 및 판매 주택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1) 다양한 시장 공급 주체 육성, (2) 기관 주도 임대 시장의 개발에 초점, (3) 임대 기관의 운영 표준화로 추진될 전망

자료 : 제10차 중앙금융경제위원회 회의 결과, 21세기 경제보고서 참고 요약

4 사회 기강 강화

1 팬덤경제 규제

□ 규제 개요

-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총무처는 "네트워크 문명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 '문명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강조
- 최근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가상 공간의 출현으로 새로운 공간 형태인 '네트워크' 세계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 노력 일환으로 분석
- * '21년 상반기 기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규모 10억 명 초과, 인터넷 보급률 71.6%

□ 규제 배경

- 중국의 아이돌 팬덤 문화는 비단 십대 팬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방송계, 에이전트, 소셜 미디어채널, 광고주, 주요 온라인 플랫폼 까지 연계된 거대한 '아이돌 경제' 규모를 구성할 정도로 성장
- 중국의 우상(Idol) 경제는 젊은 소비층이 명품브랜드에 대한 지출을 유도하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최근 몇 년간 팬덤 문화가 생성하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각종 사회 이슈 발생
- 2020년 기준 팬덤 경제 및 관련 산업 시장 규모 4조 1000억 위안 이상*
 - * 중국인터넷산업협회 《2020年全國未成年人互聯網使用情況研究報告(2021.7)》
 - *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및 팬덤 플랫폼을 통해 구성된 팬 모금액 규모 약 4천만 위안
- 또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팬덤 문화' 구성원의 저(低)연령화로, 미성년자의 가치관 생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당국의 인식
 - * 2020년 전체 팬덤구성원 중 중학생 11%, 고등학생 10.3%, 초등학생 5.6% 비중 차지

- 이에 따라 최근 △과도한 팬덤 문화 제재, △방송 출연 남성 연예인의 화장 금지 등 미성년 청소년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가 발표되고 있음
 -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시진핑 사상' 도입을 통해 '강한 중국 : 중국식 현대사회주의 사상의 부흥'을 꾀하려는 인터넷 업계 생태계 강화 조치로 분석
 - 동시에 과도하게 성장한 '특정 경제'에 대해 재정적 차원에서 국가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
- * 고소득 연예인 불법 탈세 계약 금지 등

□ 정책 연혁

- 中 당국은 연예인의 부적절한 마케팅 및 팬덤 활동 규제를 위한 일련의 조치 발표

시 기	정책명	기 관	내 용
'21.9	문화예술 및 인원 관리를 위한 통지	국가방송총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섭외 배우와 게스트 엄격한 통제 (정치 문해력, 도덕성, 예술표준, 사회평가) 기준 고수 ○ 아이돌 육성/예능/리얼리티 프로그램 방송 불가 ○ 배우 출연료 규정 엄격한 관리 시행. 배우 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복지 프로그램 참여토록 장려. 계약위반, 탈세 행위 처벌 ○ 올바른 정치, 여론 방향, 가치 지향
'21.9	연예인 중개기관 자율규제 강화	중국 공연업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예인 중개 기관은 예술가 교육 관리 책임, 자체검사 시행
'21.8	연예인 팬클럽(飯圈) 상황 시정을 위한 통지	인터넷 안전정보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 연예인 순위발표 금지(작품 순위 외 연예인 개인 목록 등 인기 순위 금지) ○ 순위조정 규칙 최적화 ○ 연예인 에이전시 관리 ○ 팬클럽 계정 관리 표준화 ○ 기금모금, 댓글 관리, 부정적 여론 확산 등 채널 관리, 팬클럽의 소비 유도 금지 ○ 미성년자 참여 통제
'21.2	공연업계 연예인 자율규제 조치	중국 공연업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예인의 사회도덕 준수를 위한 10가지 의무, 책임 조항 및 15개의 금지조항

국가방송총국의 <문화예술인 관리 통지>

- 발표일자 : 2021년 9월 2일
- 발표기관 : 국가방송총국(國家廣播電視總局)
- 주요규제 : 연예인 고액 출연료, 사생활 문제, 정치적 표현, 과도한 팬덤(열성팬) 문화
- 발표내용
 - 배경 : 최근 몇 년간 방송과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은 인민대중의 정신문화적 수요를 만족시켜왔으며, 이에 관리 강화를 위해 연예인의 비도덕적 행태 ‘밥통(飯圈: 팬덤문화를 의미)문화’를 규제하고 공산당의 애국·숭덕상예(崇德尙藝) 가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통지함
 - ① 방송계의 불법·도덕불감증 저지 : 방송, 인터넷 플랫폼은 방송 배우 선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정치 도덕적 소양, 예술 수준, 사회적 평가를 선정기준으로 견지해야 함
 - ② 방송사와 인터넷 플랫폼은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고, 스타의 자녀가 출연하는 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 방송 불가. 오디션 형태의 프로그램은 엄격한 투표관리 실시, 장외/채팅/온라인 조작 등 불법적이고 불량한 팬덤문화 차단
 - ③ 중화의 우수한 전통, 혁명,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대대적으로 발양하며, 프로그램의 미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배우의 연출, 의상 등 기형적인 미(娘炮;남포) 차단. 부유한 취미를 과시하거나 스캔들, 사생활, 저속한 성향 차단
 - ④ 출연료 규정, 이중계약, 탈세 등 방지 : 배우와 게스트 출연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며, 배우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 프로그램 참여 독려
 - ⑤ 방송 주최자(사회인)의 신분 자격 등 감독 강화. 직업 도덕규범을 보완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사회 공공 도덕의 모범을 보여야 함
 - ⑥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문예평론을 전개해 올바른 정치 방향, 여론, 가치 지향과 선도 등 역할 수행
 - ⑦ 방송, 인터넷시청각업협회 등 사회단체는 업종 규범과 자율 협약을 보완하고 자체적인 도덕성 평가 시행

□ 규제 후 영향

- 정부 발표에 따라, 중국 공연협회 등 관련 협단체 또한 사회도덕 준수 책임 조항 등 자체 규율 발표

- (주요 내용) ① 개별 연예인의 온라인 순위 게재 금지(과도한 팬 투표 조장), ② 인터넷 콘텐츠 플랫폼의 마케팅 규율 강화, ③ 에이전시 팬들 간의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게시물 게재 금지 등 세부 조항 포함. 특히 엔터테인먼트 활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신설
- 팬덤 문화소비 플랫폼 Owhat을 포함, 대표적인 온라인 APP 이용 중단. 일부 APP은 미성년자·청소년 보호모드 설치, 미성년자 충전 불가 등 조치 중
 - * Owhat 플랫폼 : 2014년 설립, 팬덤 경제 확장과 함께 주요 팬클럽 간 온라인 거래, 커뮤니케이션, 연예인 활동 관리 등을 제공하는 대형 플랫폼으로 성장. 10월부터 모든 자금 거래, 이용이 중단된 상태

□ 향후 전망

- 中 규제 당국은 최근 MZ세대로 표현되는 젊은 소비층의 부상과 인터넷+시대로 기존 팬덤 문화가 집단화와 경계화의 특징이 강한, 부정적인 요소로 발전, 청소년의 미디어 교육에 '사회의 개입'과 지도가 필요한 점을 강조*
 - * 中國教育報 <以理性之愛爲成長“發電”－關於“飯圈”亂象及治理的對談> (2021.9.25.)
- 팬 문화가 온라인 후원회, 팬클럽 등 형태로 거대화되어, 시장 내 단기간 많은 자본이 유입 ⇒ 제작사, 광고주, 플랫폼 등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난입, 거대화된 팬클럽, 후원사와 결탁해 데이터 순위 조작, 허위 광고 등 행태 만연
 - ☞ △문제 팬클럽 폐쇄, △불량 이슈 해체 등 中 정부의 구체적인 단속이 확대되고, 인터넷 기업, 교육, 문화, 종교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기강 강화가 지속될 전망

2 온라인 게임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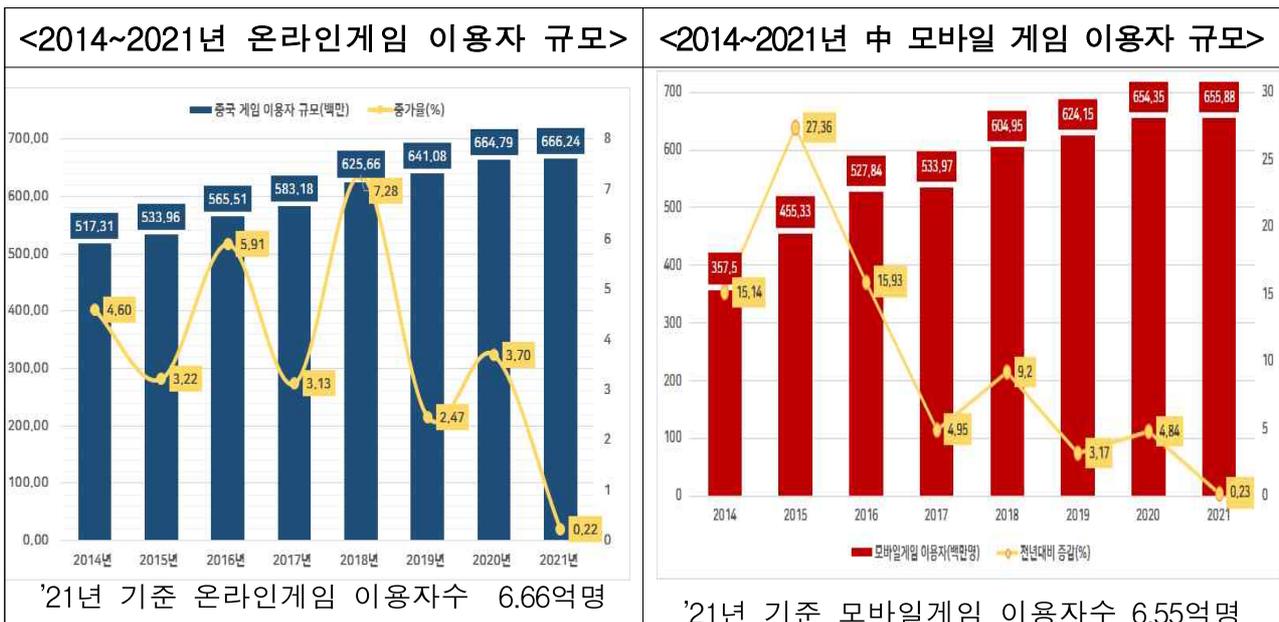
□ 규제 개요

- 2021년 8월, 중국 국가언론출판부는 미성년자의 과도한 온라인 이용 시간과 게임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엄격한 관리> 통지 발표
 -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와 인터넷 내 유포되는 불법·저급한 정보 차단 등 단속을 위한 조치
- 이는 사회기강 강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최근 노력의 일환으로,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대중문화·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문화기강 정립 등으로 표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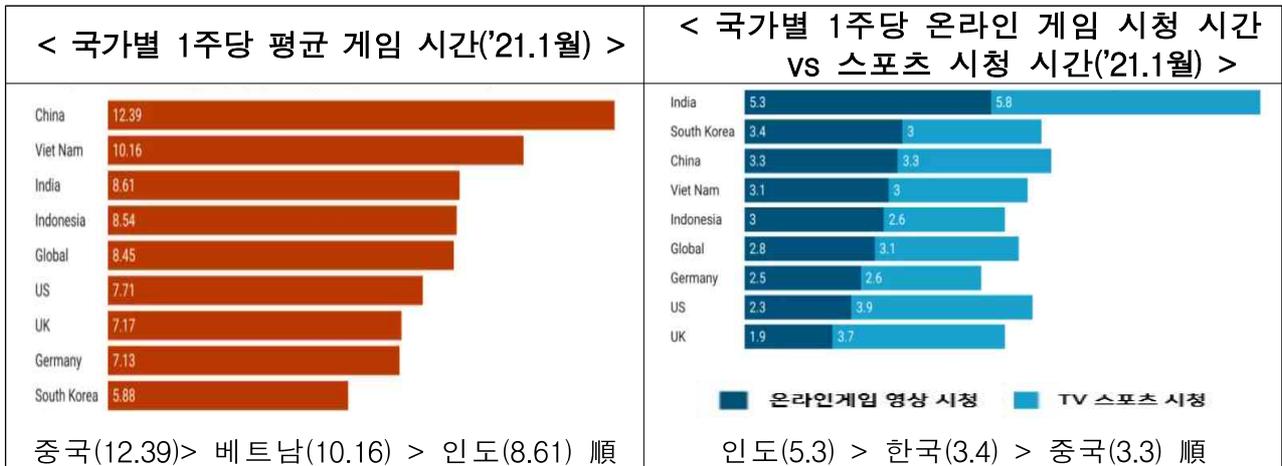
□ 규제 배경

- 中 정부는 2019년부터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온라인 중독문제, 사회 내 부정적인 여론 조성, 저속한 유해 정보 접근 등 여러 문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옴
 - 건전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최근 규제는 2019년 대비 게임 시간 등 제한이 더 강화된 조치
-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인터넷 보급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그중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이용자 규모는 2020년 기준 각 5억 1800만명, 5억 1600만명으로 전체 온라인 이용자의 50% 비중을 상회
 - 2021년 상반기 기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 10억 1100만 명, 인터넷 보급률 71.6%.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수는 10억 700명으로 전체 네티즌의 99.6% 비중 차지

- 2020~2021년 코로나19 기간에도 中 온라인 게임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 유지. 전면적 디지털 전환 추세와 홈코노미 발전은 온라인·모바일 게임 매출 성장에 기여
- 2021년 중국의 게임 사용자 수 6억 6,600만 명, 모바일 게임 사용자 6억 5,6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0.22% 증가
 - * 온라인·모바일 게임은 '14년 이후 게임 이용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고성장했으나, 中 인구 통계학적 규모 요인과 영역 포화 영향으로 연간 증가율점차 감소세
-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5G 네트워크의 발달로 '14~'20년 온라인게임 대비 모바일 게임 이용자 규모가 더 크게 증가
- '21년 중국 게임시장 판매규모 약 2,965억 위안으로 '20년 대비 6.4% 증가. 이 중 中 자체 연구개발 게임상품의 국내 판매규모 약 2,55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으며, 전체 시장의 86% 비중
 - * 넷이즈 2021년 3Q 순이익 159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 * 텐센트 2021년 3Q 매출액 1423.68억 위안,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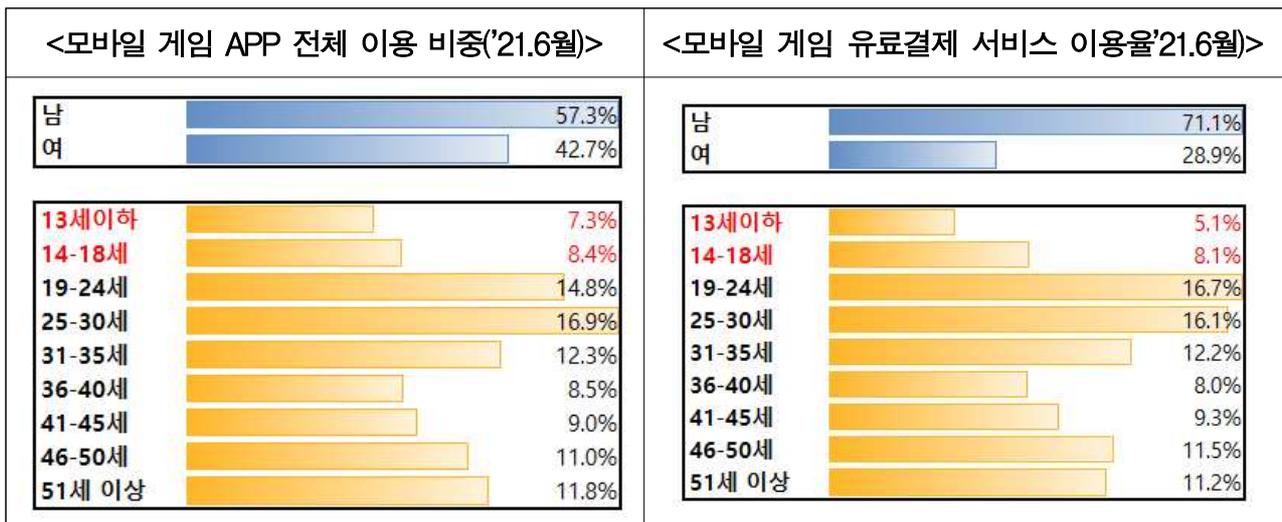


자료: 중국 게임산업 연구원(中國游戏産業研究院), 첸 잔산업연구원



자료 : World Economy Forum

- 하지만 최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온라인(네트워크) 생태계 시스템 점검, 문화엔터테인먼트 사회 기강 재편 등 일련의 개혁 움직임에 덧붙여, 중국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중독, 유료 결제 서비스 피해 등 문제에 직면하여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 * 미성년 이용자의 82.4%가 온라인 게임 충전을 경험(iiMedia Research)



자료 : Questmobile

- 최근 게임산업 또한 중요한 '콘텐츠'와 가치 보급 채널로 인식, 사회내 긍정적인 이미지와 중국 정부의 사회주의 사상 등 콘텐츠에 대한 규율 또한 강화되고 있음

□ 온라인게임 관련 정책 연혁

시 기	정책명	기 관	내 용
'21.8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엄격한 관리 통지	국가언론 출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온라인 게임회사는 금/토/일요일 및 공휴일 20:00~21:00 시간에만 1시간의 온라인 게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른 시간대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게임서비스 제공 불가 ○ 게임사용자 계정 실명 등록, 로그인 요구 사항 구현 ○ 온라인 게임제공자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 실명, 지불 체계 등 감독 강화
'21.1	초중등학생 휴대폰 관리 강화 공지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학교 내 휴대폰 반입 불가, 반입시 학부모 동의와 서면 신청 필요 ○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관리를 일상관리 체계에 통합하고 보관/감독 책임자 지정
'20.10	중국 미성년자보호법	전국민인 대표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5장 인터넷 보호 조항 추가('21.6.1부시행) - (제75조) 온라인게임은 법률로 승인한 후에만 운영될 수 있으며, 국가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에 대한 통합 전자 인증 시스템을 구축 - <u>온라인 게임 제공업체</u>는 ①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게임 제품을 분류하고, ② 연령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③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게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하며, ④매일 22:00~8:00에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20.8	미성년자를 위한 사이버 환경 특별 거버넌스 활동 공동 실시 발표	교육부, 국가언론 출판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 온라인상의 부정적인 정보 등에 중독되어 신체/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19.11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통지	국가언론 출판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게임 실명 등록 추진,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시간제한 (매일 22:00~8:00) 시간대에는 게임 서비스 제공 불가. 법정

			<p>공휴일의 게임 누적 시간 3시간 초과 불가, 일일 누적 시간 1.5시간 초과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서비스 표준화 ○ 8세 미만 사용자 유료서비스 제공 불가
'18.4	초중등 학생의 온라인 중독 방지에 대한 긴급 공지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저급한 소설, 도박 등에 중독되어 신체·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인명피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통지 발표

- 2020년 8월 중국 각 부처는 ‘미성년자 온라인 사회 문제’에 대해 공동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간 계획을 발표함

< 中 부처별 미성년자 온라인 사회문제 관련 추진 계획(20.8월) >

협력 부처	주 제	내 용
언론출판부, 인터넷판공실, 교육부, 전신부,公安部	미성년자 인터넷 중독문제 관리	온라인게임 실명등록, 시간제한, 온라인 플랫폼 간 게임 유료서비스 요율 표준화, 불법 게임 조사 및 처벌
公安部 주도	부정적인 인터넷 사회행동 점검	미성년자의 부정적인 온라인 사회행동에 대한 통제 강화 * 모욕, 인신공격, 사이버 불링, 폭력행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불법행위 단속
인터넷판공실 주도, 시장감독부서 등 협력	저속하고 유해한 정보 특별 관리	온라인 게임, 저속한 웹소설, 엔터테인먼트, 라이브생방송 등에서 방출되는 성인용 콘텐츠, 폭력적 사상, 숭배 사상, 미신, 자살·범죄 관련 등 사회풍속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콘텐츠 관리
인터넷판공실 주도, 통신, 公安 등 부서 협력	기업 감독 강화	인터넷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기업의 주요 책임사항을 명시, 미성년 관련 정보 내용 감사 강화, 유해정보 적시 처리, 주요 플랫폼별 청소년 전용 플랫폼 구축, 양질의 콘텐츠 공급 강화

<p>교육부 주도</p>	<p>교육 홍보 및 지도 강화</p>	<p>초중등 학생 대상 네트워크 문해력, 네트워크 보안 교육 홍보 강화. 가족교육 지침 매뉴얼 배포 및 가족 단위에 관리 주도, 미성년자가 문명화되고 건강한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는 법 교육, 온라인 중독 방지</p>
---------------	----------------------	--

□ 규제 후 영향

○ 단기적으로 온라인게임 관련 기업의 주가 폭락

- 중국 온라인게임 2대 게임사 A주 주가 하락세 시현

- * 텐센트 : '20.12월 최고가 750위안 이후 '21.6~12월 430위안대로, 약 -42%대 하락 ('22.1.25. 기준 471위안대로 '20년초의 수준 유지)
- * 넷이즈 : '21년 2월 최고가 206위안 이후 '21년 8월 116위안대로, 약 -43%대 하락 ('22.1.25. 기준 156위안으로 '20년 중반의 수준 유지)

○ 위의 조치에 따라, 주요 온라인 게임 플랫폼(텐센트 등)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 (텐센트) 12세 미만 미성년자의 유료 게임 소비 완전 금지 조치

- '21. 3분기 텐센트 실적 발표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국내 게임 플레이 시간 비율은 0.7%로 '20.3분기 6.4%에서 크게 감소함
- 또한 미성년자의 국내 게임 비중 1.1%로 전년 동분기 4.8%에서 크게 감소함
- 텐센트는 게임산업의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자 보호조치 강화를 시행하여, 미성년자 게임등록시 안면인식 프로그램 가동, 약 210개의 텐센트 게임 내 게임플레이 시간제 도입

○ '21년 9월 기준, 중국내 약 524개 기업의 2,176개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시스템 조치 완료, 10월 '베이징 국제게임혁신 컨퍼런스'에서 약 105개 기업이 온라인 게임업계 중독 방지 자율규제 공약에 서명

□ 향후 전망

- 중국 온라인 게임 산업은 '21년 3분기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단기간 영향을 받았으나, 4분기 이후부터는 각 주요 플랫폼의 중장기 계획, 해외사업 확장 등 조치 발표 및 기존 중국 온라인 시장의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실제 주요 게임기업의 주가 하락세는 있었지만, 오히려 매출액과 산업 규모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 게임사는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면인식 등록제 도입' 등으로 법규에 따른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시장 영향력을 지속 확대
 - 특히 모바일 게임산업에서 바이트댄스(틱톡)가 정식으로 게임사업에 신규 진출(21.2월)하는 등 대형 인터넷 기업의 산업 진입으로 시장 경쟁 가속화
- 중국 인터넷산업협회(CNNIC)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온라인 게임 산업은 사회적 책임과 산업 발전이 병행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 주요 특징으로 드러났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회적 책임 측면은 업계 안팎에서 더욱 중시될 것이라 분석
 - '21년 4월, 중국 인터넷산업협회 및 약 13개의 주요 게임사(텐센트 등)은 공동으로 <온라인 게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리체계>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의무 이행과 사회적 책임 목표 확립을 위한 단체 기준이 마련됨
- 4분기부터 강화된 중국의 3대 정보보안법 체계(네트워크·데이터 보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요 게임기업의 마케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 예를 들어 기존 게임기업은 사용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게임 추천 등으로 사용자 규모를 늘려왔으나, 법규 시행 이후, 개인화된 마케팅을 위한 정보동의 취득 절차에 유의해야 하며 정보 보호 시스템 또한 자체적으로 구축·강화해야 함

IV 시사점 및 우리 기업 대응 방안

□ 중장기 변화 주목 : '공동부유' 키워드

- 중국 정부는 2020년 1인당 GDP 1만 달러를 돌파했으나, 고령화 사회 진입, 출산율 저하, 지속되는 미중 갈등과 글로벌 회복 불안정세 등 문제에 직면
- 중국 정부는 제14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에는 중국은 고소득국가(1인당 국민소득 \$ 12,695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간소득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약 5년간에 걸친 사회경제 전반의 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중국은 중진국 함정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제조 2025>(제13차 개발계획), 내수 소비로의 성장축 이동, 쌍순환(제14차 개발계획) 등 국가 정책 방향 설정

※ 중간소득 함정

- 세계은행이 2006년 <아시아경제발전>에서 처음 제기한 개념, 저소득국이 중간소득국가 단계에서 성장력을 상실하여 고소득국가에 이르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르거나 다시 저소득국가로 후퇴되는 현상
- 중간소득 국가가 기존 노동요소 투입으로 인한 성장 방식 한계, 고정투자 효율 둔화, 생산성 하락시 발생
- 1960년 이래 일본,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15개국만이 중간소득 함정에서 벗어났으며, 대부분의 후발 국가가 1인당 GDP 1만 달러에서 성장 정체

○ 향후 추진될 정책 방향

주제	내 용
소득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증대) 소득 임금 증대 및 경제안정을 위한 고용 증가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 민간 부문 개발, 특히 중소기업 및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지원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임금소득 증대) 기존에 부동산으로 편중된 가계 자산 소득 증대 채널 다양화를 위해 농촌 지역 토지 이용권 개혁과 자본 시장(주식, 채권 등)의 추가 발전 기대 ○ (중간소득 인구 확대) 중간소득 인구집단 확대를 위한 공교육, 직업교육 강화. 대학 및 직업학교, 숙련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 초점
세제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소득세) 세금기반이 작고, 한계율(45%)이 높으며, GDP의 1.5% 미만에도 못 미치는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등 개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확대 등 기타 정책과 영향력을 감안해 단기간내 도입되기는 어려우며 대신 소득세 부과 유형 다양화(자본이익, 배당 금세 도입 등)와 공제 항목 증가(자녀양육비 등)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될 전망 * 中 소득세 2020년 GDP의 1.1 %, 또는 총 세금 소득의 7.5 % ○ (재산세) 현재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향후 2년 이내 도입 전망, 또 기본 거주 안정보장이라는 공동부유 목표 달성을 위해 토지공급 정책 조정과 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 방식으로 이어질 것
공공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기본 공공서비스 분야 비용 절감과 서비스 접근에 대한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규제 추세는 향후 지속될 전망 ○ 기초교육(핵심교육), 육아, 노령층 간호서비스, 보건건강, 스포츠문화 등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사회안전망 및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연금 커버리지비율을 91%에서 95%로 늘리고, 실업, 산재, 건강보험 혜택 증대 ○ 연금제도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간 자본이전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전망, 기업연금과 상업보험 산업 개발 장려
3차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과 자선단체의 기부, 사회 환원을 의미, 향후 기부금에 대한 공제 인센티브 제도 등으로 장려할 전망

자료 : 각 정부 발표내용, UBS투자은행 분석을 토대로 KOTRA 상하이무역관 작성

□ 시장 영향

- 2021년 1월의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공동부유 추진의 핵심 분야로 고용, 소득분배, 교육, 사회보험, 의료, 주거, 양로 산업을 지정한 이후, 특히 가계 내 지출 비중이 큰 분야(부동산/주거/의료)에 대한 규제 강화
 - 가계의 지출 부담을 경감해 소득 확보 주도, 저소득층의 불합리한 임금 구조 개선* 등 산업 다방면의 정책과 규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
 - * '21.7월, 시장감독총국은 <배달 플랫폼의 책임 이행에 관한 지침> 발표를 통해 배달원의 정당한 권리(노동안전, 사회보장, 고용환경)와 임금(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 수준)를 보장할 것을 촉구함
 - * '21.10월, 중국 최대 배달플랫폼 메이투안에 반독점 등 행위로 34억 위안 벌금 부과
- 중국 정부가 주로 규제하는 산업 영역은 온라인 빅테크 플랫폼, 사교육 시장, 부동산 등 과도한 자본유입과 불공정한 관행이 만연한 산업 위주임
- (중장기)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건전한 경쟁 질서 조성, △독과점 구조 완화, △신규 시장 주체(개인·중소기업)의 활발한 진입, △소비자 권익 보호, △데이터의 공공재化 등 긍정적인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 (단기) 관련 기업은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의 비즈니스 확장 및 혁신 활동 위축 가능성과 시가총액, 주가 하락 등 영향을 받음
-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규제의 장기화·지속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고 또 최근 부동산 등 민감한 영역에 대해서는 안정화 신호를 지속 방출함에 따라 시장에도 어느 정도 정책 효과가 반영되었다는 분석
- 향후 규제가 적용될 산업은 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과도하게 수익이 창출된 영역으로 이어질 전망

- 최근 열린 중앙정부 고위급 회의*에서 경제 구조 개혁 기조는 변경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역 재정 압박과 경기 하방 위험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중앙의 신호 방출로 시장 안정·신뢰 구축 시도 중
- * ('21.8월) 제10차 중앙금융경제위원회 회의, ('21.9월) 3분기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회의, ('21.12월)중앙경제실무회의 등

□ 시사점

- ‘공동부유’ 방향에 따라 경제 핵심 어젠다는 성장 → 분배로 이동
 - 단기적으로 규제 리스크, 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시장 영향 요인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득 확대·내수진작을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 기존과 같은 대규모 재정자원 투입을 통한 양적 성장, 저부가가치 생산 산업 위주로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중국 정부는 미래 성장 축을 내수소비·투자로 전환하여 안정적 성장 여건 확보에 주력함
 - * (쌍순환) 외적으로 수출, 개혁개방을 확대, 내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해 중국을 둘러싼 국내외 시장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전략
- 품질 성장·내수 소비 확대 기조로 수혜산업 창출
 - (품질 성장) 주요 산업 자국화·품질 업그레이드 기조
 - 정부육성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은 투자 인센티브·세제 혜택 등 지원, 자국 내 소비비중이 높으나 수입의존도가 높고 민생 경제와 관련된 산업군(화장품·식품)에 대해서는 국내외 생산·유통자에 대해 자격 요건 강화

정부육성 산업	환경·IT 등 신성장 산업	소비재
첨단기술 제조업 (반도체, 소재) 신에너지차 2차전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의료복지 자산시장(주식·펀드)	고급소비재 브랜드화

- (내수진작) 중간 소득 인구 비율 확대, 저소득층 지원, 농촌 지역 소비 부양책 등 중국 내수 확장 요인 존재
- * '21.9월, 상무부 <소비 보장과 새로운 개발 패턴을 구축을 위한 소비촉진 통지>를 통한 신에너지차, 가전가구, 식음료 등 분야의 소비 대규모 확대 추진
- * **신형 소비 개발 가속화** : 전통적인 비즈니스 기업의 디지털, 스마트화 지원
- * **소비자 플랫폼 최적화** : 국제 소비 중심도시 건설(상하이 등), 소비촉진 이벤트 구성 (중추절, 국경절 등 소비 시즌 연계 페스티벌 활동), 야간경제 활성화 등

□ 우리 기업 대응 방안

- 中 중앙정부의 경제 구조 개혁 기초 장기화 시사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정부 규제 방향에 대한 동향 분석 필요. 특히 대중 투자는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친환경·신성장 요인)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특히 중국 정부가 제시한 3대 핵심영역(부동산, 교육, 의료)는 단기 내 정책변화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 필요
- 중국 정부의 내부 제도 규율 강화와 대외 시장 저변 확대(RCEP 체결, 일대일로 등)로 주요 중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
- 실제 2021년 중국내 규제 강화, 국내시장의 데이터 트래픽 규모가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중국계 플랫폼 대기업을 해외 진출 본격화

※ 중국 빅테크기업 해외진출 동향

- (알리바바) 동남아시아 3억명 소비자를 타겟팅해 전자상거래 연간 판매규모 US\$ 1천억 달러 달성 계획 발표. 특히 국경간 글로벌 소매사업 위주로 자체 알리익스프레스(글로벌), 라자다(동남아)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진출 본격화
- (알리바바 클라우드) 2021년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및 기타 지역에 신규 데이터센터 설립, 향후 3년간 인프라 및 산업 생태계 구축에 60억 위안 투자 계획 발표
- (징동) 전세계 50개 국제보세창고 및 전세기·중국-유럽철도 교역로·항공로 포함 약 1천여개 국제운송 루트 보유, 징동의 글로벌 공급망은 약 220개국에 분포, 자체 해외공급 플랫폼(Joybuy.com)기반으로 동남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합작사 설립

○ (바이트댄스(TIKTOK)) '21.9월 크로스보더 e커머스 플랫폼인 '틱톡쇼핑' 정식 출시. 전세계 월간 액티브 유저(MAU) 10억 명의 사용자 데이터 기반, 동남아 시장을 시작으로 전자상거래 사업 확장 계획. 또 '21.3월, 40억 달러 투자로 동남아 최대 게임회사(MOBA) 인수로 전세계 모바일 게임시장 영향력 확대 중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진출 확대로 중국산 제품, 문화콘텐츠 산업 제품(게임·IP 등)의 해외 시장 진출이 용이해졌으며, 특히 우리 기업과의 경합시장(동남아 등)에서 경쟁 가속화 전망 → 품질 생산을 통한 경쟁 우위 선점 필요

○ 최근 강화된 규제는 공동부유(장기)·14차 5개년 개발계획(중기)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 리스크로 장기적으로 내수 안정화를 뒷받침할 것

-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소득분배 구조개혁,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통해 중국은 지속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며, 이는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기회 요인

- 신형·전통 인프라 투자 확대, 자원배치 효율성 제고, 소비력 향상,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정되고, 시행될 것으로 기대

첨부 1 | 현지기업 인터뷰 (부동산)

- 면담 기업 : 팡텐샤(房天下) * 부동산중개플랫폼 및 현지 세법연구소 면담 종합
- 면담 기간 ' 21.9~12월

질문 1) 팡텐샤 소개

- 답변 : 팡텐샤(房天下, FANG.COM)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2010년에 뉴욕 거래소에 상장함. 매일 약 2,000명의 부동산 중개사가 신규 등록, 등록된 중개사는 276만 명에 달함. 현재 전국 642개의 도시에 영업사무소가 있으며, 주로 신규 주택, 중고 주택, 주택 임대 등을 중개함

질문 2) 2021년 1월, 상하이시에서 사상 최초로 가장 엄격한 상하이 10조(沪十条)라는 부동산 규제를 발표함. 관련 해서 가장 영향이 큰 부분은?

- 답변 : 약 3가지 차원에서 실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먼저 이번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은 부동산 투기 단속으로 보임. 이번 규제에서 부부가 이혼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구매할 경우 이혼 전 가구의 총 주택 수로 합산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최근 만연한 위장 이혼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타격을 주었음. 작년부터 난징, 우시 등 여러 도시에서도 이혼 후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비슷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단 난징, 우시의 경우 기한을 2년 이내로 지정하였으나, 상하이시는 기한이 3년으로 좀 더 엄격한 편임.
또 주택 구매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증치세 전액을 과세한다는 조항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중고 주택의 거래 주기가 연장되었음. 이는 일부 수요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겠지만 동시에 중고 주택의 시장 공급량 하락도 초래할 것.

세 번째로는 **상품 주택(商品住房, 매매 가능한 모든 주택) 용지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조치임. 이는 주택 수급 갈등을 원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최근 2년 간 상하이시는 상품 주택 용지의 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있음. 2018년부터 2020년 기간, 관련 건축면적은 375만㎡, 571만㎡, 928만㎡로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상품 주택이 총 주택용지에서의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34%에서 2020년 60%로 증가함.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향후 주택 공급은 더욱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됨. 다만 토지 매매부터 건축 및 판매까지 3~5년까지 긴 시간이 필요해 이 조치는 단기간 내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질문 3) 상하이 10조(沪十条) 출범 후, 상하이시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 답변 : 최근 수개월의 정책 규제로 인해 **상하이시 중고 주택은 가격과 거래규모 모두 급락**하고 있음. 상하이시 16개 구(区)의 8월 거래가는 7월 대비 모두 하락했고, 하락폭이 가장 큰 구(区)는 신개발구역인 자딩구(嘉定区)로 7월 대비 7.93% 하락함. 9월 27일 기준, 상하이 부동산 온라인 계약 건은 9,700채로 9월 기간 중, 약 1만 채가 거래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월의 1만 8,000채 대비 약 40% 감소된 수치임

질문 4) 향후 중국 부동산 시장 전망

- 답변 : 21년 1월 새로운 정책의 시행으로 3월부터 중고 주택 거래 단가가 하락하기 시작함. 6월 중고 주택 가격이 약 1% 상승하자, 상하이시 정부는 곧바로 대출 금리 인상 (최초 구입 주택 4.65%→5%, 두 번째 주택 구매(二套房, 아파트 등 주택 소유자의 한 채 추가 구매)는 5.25%→5.7%)과 중고 주택 판매 가격 심사 제도 등 추가 규제를 발표하여, 주택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책은 목적성이 매우 뚜렷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 의지를 시장에 보인 것으로 판단함**.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 시행과 중고

주택 거래 비수기인 3분기가 겹쳐 하반기 상하이 중고 주택 시장의 거래량은 계속 하락세를 보일 것. 하지만 상하이의 주택 수요는 여전히 공급보다 상회하여, 가격 면의 큰 폭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임

또, 지난 2021년 10월 23일, 제2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국무원은 <일부 지역부터 부동산세 개혁 시험사업 전개를 승인하는 결정(초안)>을 통과한 바 있음. 이처럼 부동산세 시험개혁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세한 공식적 설명이 나온 것은 처음이며, 향후 부동산세 개혁 경로도 비교적 명확해진 것으로 보임. 국무원 시범 사업의 정식 시행 시점은 22년 양회(3월)이후로 예상되며, 실제 시행업무는 지방정부에서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부동산 평가 등 사전작업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2022년에는 실제 징수가 이뤄지지 않고 이르면 2023년, 2024년부터 징세될 것으로 보임.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에 신설되는 부동산세 등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단기적으로 주택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의 구축과, 공동부유(共同富裕) 발전을 촉진하는 등 국가적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짐

첨부 2 | 현지기업 인터뷰 (온라인게임)

- 면담 기업 : 중국게임 A사
- 면담 기간 ' 21.9~12월

질문 1) 2021년 8월,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중독방지를 위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게임사의 전반적인 반응과 대응은?

- **답변** : 통지발표 이후, 중국의 주요 게임사들은 즉시 법안에 맞춘 규정을 도입, 실시했음. 예를 들어 텐센트는 통지 발표 26시간 만에 텐센트의 중국 전지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상품 전체 대상 ‘미성년자 플레이시간, 시간대 지정, 계정실명 등록’ 등 프로그램을 설치했음. 중국 공안국(公安)과의 정보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미성년자 실명 계정은 플레이 시간 제한이 도입되고, 게임비용 충전 등 금전적 차원으로라도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더욱 엄격한 관리 체계로 들어감. 대체로 기술력이 있는 대기업은 자체 개발한 안면인식 보안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미성년자가 성인의 계정을 도용해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일련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질문 2) 이러한 조치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이용자 규모 하락, 수입감소 등)가 있다면?

- **답변** : 일시적인 데이터 수치 하락 등 변화는 있지만, 이는 단순히 ‘게임중독 방지 통지’ 발표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최근 전체 게임 산업계에서 구체적인 IP 활용방법, 신제품 개발, 고도의 게임기술 도입 등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과 맞물려 발생한 것이라 생각됨. 세계적으로도 각국의 미성년자 보호정책은 반복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을 거쳐 온 것을 보면, 중국 게임 산업계도 정책·기업 차원에서 변화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개선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분석함

질문 3) 이러한 조치 이후 어떤 어려움과 도전을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 ◎ 답변 : 예를 들면 인터넷 익명성으로 인한 사칭 문제, 노인 계정을 함부로 도용한다는지 하는 문제가 있고, 지속적으로 신기술 도입으로 조정과 해결이 필요함.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한 업체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전체 산업계와 정부, 협회가 함께 고민해야 함. 시장 영향력 있는 텐센트게임즈와 같은 대기업은 휴대폰 제조사, 교육부와 제휴하여 휴대폰 제품 내에 보호프로그램 모듈을 내장하고, 또 통신사와 제휴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다차원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함. 이러한 선도기업의 사례는 업계내로 전파·확산될 것으로 보임

첨부 3 | 현지 전문가 인터뷰 (빅테크기업)

※ 상하이교통대학교 법학원, 중남재경정법대 데이터경제연구원, 난카이대경제학원 등 현지 전문가의 언론인터뷰를 종합하여 정리함 (일자 : ' 22.1월 기준)

질문 1) ‘디지털 경제’가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부상하면서, 주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한 ‘반독점법’이 새로운 키워드로 떠올랐음. 2021년 4월 10일, 알리바바는 ‘2선1(二选一) 독점행위’를 명목으로 중국 반독점법 아래 사상 최대 규모인 182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6개월 뒤 메이툰(美团)은 34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은?

- ◎ 답변 : 알리바바, 메이툰에 대한 사상 최대치의 벌금 부과 사건은 중국 당국의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처벌의 의지를 보여주며,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다른 플랫폼업체에게도 경고를 주는 효과가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상적인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초반에는 주로 법 집행부문의 강력한 처분 형태로, 특히 벌금을 많이 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기업에게 준법·준수를 유도하고, 플랫폼 업체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법 집행기관은 동시에 행정 지도도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알리바바와 메이툰에 대해 각각 행정처분결정서(行政处罚决定书)와 행정지도서(行政指导书)도 발부한 바 있음.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도 최근 ‘경영자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요 플랫폼 업체도 점차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양상을 보이며, 지난 7월 30여개 플랫폼 업체가 모여 ‘플랫폼 업체 반독점 합규자율협약’도 체결했고, 중국표준화협회 주관으로 40여개 플랫폼 업체가 참여해 ‘단체표준성의 합규준칙’도 제정한 바 있음. 이처럼 국가차원에서의 법 제정과 동시에 법 집행 강화, 기업들의 자발적 단체규약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반독점 추세가 상시화되고 있음

질문 2) 국가의 반독점법 강화 배경 하에, 관련 법률·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경제는 큰 성장기를 거친 뒤, 현재 ‘준법의 발전 단계’를 맞이했다고 분석됨. 데이터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데이터 보안 작업 또한 플랫폼 기업의 중요한 업무사항이 되었음.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의견은?

- **답변** : 반독점 강화는 중국 뿐 아닌, 최근 세계적으로도 강화되는 추세로, 특히 ‘플랫폼을 기반 경제(平台经济)’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플랫폼 경제’는 산업 구조상 전통적인 경제와는 달리 크로스 네트워크 효과와 크로스오버 경쟁 등의 특징을 보이며, 정부 등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기술과 자본의 우위에 힘입은 일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은 경영규모 확장과 사업영역 확대로 성장하는 반면, 중소형 기업의 경우 사업 공간이 더 축소되는 등 부정적인 시장효과가 나올 수도 있음. 특히 중국의 경우 일부 선두 플랫폼 업체는 자체 자금을 기반으로 대량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쟁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킨 후, 가격을 올리는 사례도 있었음. 또 플랫폼 기업은 지난 몇 년간 큰 성장을 거듭하여 시장 규모가 크고, 민생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일부 플랫폼 기업은 여신 등의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음. 또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막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권익과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 중국의 반독점 강화, 특히 인터넷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执法) 강화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보임

질문 3) 2021년 중국은 ‘공동부유(共同富裕)’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빅테크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알리바바, 텐센트 등 각 기업의 ‘공동부유 10대 행동’ 발표와 사회적 기부를 발표했고, 바이트댄스(틱톡), 핀뉘뉘(拼多多), 징둥 등도 이에 동참한 바 있음. 빅테크 플랫폼기업의 ‘공동부유 국가 목표’에 응하는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은?

- **답변 :** 선도 인터넷 기업의 ‘공동부유’에 대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중국정부의 발전 목표인 **농촌진흥, 기술혁신 분야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더 많은 인터넷 기업이 ‘공동부유’ 달성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인터넷 기업의 경영 전략 또한 국가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음. 예를 들어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상업화를 위한 목적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실물경제를 촉진하고, 민생 분야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사회 전체적인 공동부유 달성을 위한 것으로 맞춰지고 있음. 이는 인터넷 기업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기업은 기술, 자원, 데이터 정보의 우위를 활용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시장 확대를** 이뤄내고, 정부 또한 사회 전체적인 **분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쌍방으로 호혜적인 상호 작용**이라고 생각함.

< 참고 자료 >

1. Asiafinancial, “What Is China’s ‘Common Prosperity’ Drive and Why Does It Matter?”(21.9.2)
2. 網經社電子商務研究中心發布《2021年（上）中國網絡零售市場數據報告》
3. 中商產業研究院 <2021年上半年我國網絡購物用戶規模8.12億 占网民整体80.3%>
4. 市場監管總局,《市場監管領域重大違法行為舉報獎勵 暫行辦法》政策 (21.8)
5. 網經社, <2020年中國在線教育融資額TOP10榜單> (21.9)
6. 澤平宏觀, <中國收入分配報告2021：現狀与國際比較>(21.8)
7. 中房研, <全國房地產政策變動監測報告（2021年8月）>
8. 中房研, <重点城市房貸利率超七成上調, 多城二手房近乎“停貸”> (21.9)
9. 텐풍증권(天風証券) 2021.10.16. <傳媒互聯网络行業分析>
10. 澎湃号, 中國房地產報, 2021.9.29 <央行例會罕見提及房地產 房貸政策最嚴時期或已過去>
11. 國海証券, 2021.10.11. <房地產行業專題報告：實現共同富裕的房地產路徑>
12. 中國互聯网络信息中心 (CNNIC), <2020年中國網絡游戲行業用戶規模分析> (21.2)
13. 國家新聞出版署, <《2020中國網絡文學發展報告》> (21.10)
14. 21世紀經濟報道, 2021.8.19. <“共同富裕”目標下的房地產角色：居住、保障与再分配>
15. 新浪財經, <展望普惠金融新5年規劃, 貸款增速已到拐點？> (21.9.21)
16. 中房研協, <全國房地產政策變動監測報告（2021年9月）> (21.10.2)
17. 明源地產研究院, <實現共同富裕, 房地產行業會有哪些調整？>(21.10.14)
18. 인민은행 <2019년中國城鎮居民家庭資產負債情況>, (2019)
19. 인민은행 <2021年二季度金融機構貸款投向統計報告> (2021.7)
20. 北京大學 <北大厲以寧教授關於“第三次分配”的思考与論述>(21.8)
21. iimedia, <市場規模同比增長35.5%, 2020中國在線教育行業研究報告> (21.3)
22. 中國銀行保險報网 <房地產開發貸款增速大幅下滑 人民銀行、銀保監會着手化解>(21.10)
23. 국무원, 시장감독관리총국, 교육부, 인터넷판공실 등 각 정부 부처 홈페이지



윤리경영·청렴 레터

KOTRA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귀하(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OTRA는 윤리경영·청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 여러분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첫째,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에 앞장선다.
- 둘째,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금품·향응을 거부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과 청탁도 배격한다.
- 셋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다.
- 넷째, 항상 사람을 최우선하고, 임직원, 고객, 협력사,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 다섯째, 안전의식을 가지고 위험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여섯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다시 한 번 깨끗하고 공정하고 일 잘하는
KOTRA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클린신고센터(부패신고채널)
전화: 02-3460-7010 Email: clean@kotra.or.kr Fax: 02-3460-7902
우편: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감사실 행동강령책임관

작성자

- | | |
|----------|-----|
| ◆ 상하이무역관 | 김다인 |
| ◆ 아대양주팀 | 이정민 |

Global Market Report 21-054

중국 공동부유론과 주요 규제 동향

- 발행인 | 유정열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22년 1월 28일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의처 | 아대양주팀 이정민
(02-3460-7673)

ISBN : 979-11-402-0174-7 (95320)

